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November
Vol. 47

11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드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November, 2020
VOL. 47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트

-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박정수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주요 국가의 데이터 거버넌스 동향과 시사점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20 · 재정칼럼

-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 생활 속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김영미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30 · 톺아보기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안



재정 NOW

- 32**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38**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44** • 키워드 재정
세종학당
- 48** • 해외재정동향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 52** • Data for All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그 속에 데이터 라벨링



재정 STORY

- 54** • 이달의 재정 이야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60** • 재정 Talk Talk
재정의 성질별 분류란 무엇인가요?
- 62**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과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
- 66** • 경제철학 이야기
이스라엘 커즈너: 기업이 정신론의 개척자
- 70** • KPFIS의 서재
- 72** • 재정 캘린더
- 74**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이든, 행정에서의 정부 간 경쟁이든, 이제 전장(戰場)은 데이터로 옮겨갔다. 반면 데이터는 차고 넘친다. 수십억 고객·국민의 모든 클릭과 터치는 즉각 데이터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경쟁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자체가 경쟁력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 경쟁력인 셈이다. 즉, 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Δ 어떻게 정제하고 Δ 어떤 표준으로 호환하고 Δ 누가 관리하고 Δ 무엇에 활용할지 등을 정하는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경쟁'이다. 경쟁 목적은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두 꼭지에 걸쳐 데이터 거버넌스 담론을 다룬다. 먼저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Δ 개념 Δ 디브레인 중심의 현행 거버넌스 분석·평가 Δ 차세대 디브레인이 갖추어야 할 거버넌스 등에 대해 살펴본다. 두 번째에서는 '주요국 데이터 거버넌스 동향과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Δ OECD가 제시하는 거버넌스 표준 Δ 뉴질랜드·노르웨이·네덜란드의 데이터 거버넌스 사례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Data Governance



01
KPFIS - 인사이트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박정수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ymajesty@kpfis.or.kr)

1 —————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

공공데이터 분야의 최근 이슈는 단연 ‘데이터 공동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이다. 데이터 공동활용의 경제적 편익은 민·관 공동 이용의 경우 전체 GDP의 1.0~2.5%,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만으로도 0.1~1.5%에 이를 정도다(OECD, 2019). 물론 데이터 공동 활용이 저절로 될 리 없다. 생성에서 폐기에 이르는 데이터의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데이터 관리체계 또는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라고 한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폐쇄적 의미로는 특정 시스템의 업무 처리자와 데이터 사용자 등 행위자(Actor) 간의 역할 분담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서 개별 업무 처리자는 자신의 업무에 한해서만 시스템 사용권한을 가진다. 한 회사의 경영정보시스템¹이라 해도, 생산 부서와 유통 부서는 시스템의 서로 다른 화면을 보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다루고,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하는 데이터도 서로 다르다.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 차원(Enterprise Level)에서의 데이터 생산·수요 불일치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부서에서 이미 한차례 사용된 데이터라고 해도 다른 부서가 이를 재사용(Reuse)해 부가가치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데 폐쇄형 체계에서는 이런 사용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 다른 부서가 가진 정보의 열람은 물론 서로가 어떤 데이터를 가졌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과 별도로 정보계를 두어 필요한 정보가 조직 내에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 그리고 정보계 내에서 데이터 요청자와 접수자, 반출 승인자, 자료 추출 담당자 등 관련되는 행위자의 역할 등을 자세하게 문서로 만들어 운영지침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정보계 운영지침을 좁은 의미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기도 한다.

반면 최근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하나의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 사용자³ 간의 자료 유통뿐만 아니라 미사용자⁴의 데이터 활용까지 다루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¹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라고 하며, 전사적 자원관리가 보편화된 최근에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이라고도 한다.

² 정보계의 필요성은 특히 조직 내 부서가 많고 칸막이 현상(Organizational Silo)이 심할수록 필요성이 커진다. 만약 필요한 정보를 부서 간에 1:1로만 해결하라고 한다면,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데이터 획득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며, 데이터 획득에 필요한 시간 등의 자원 역시 막대하게 소모되어 결과적으로 데이터 재사용으로 인한 편익을 압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보 유통은 특히 2000년대 후반까지 유행했던 재정 분야 통합재정정보시스템(IFMIS: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구축에서 간과했던 부분이다(Dener and Min, 2013). 시스템은 통합 구축되어 개별 업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지만, 정보의 공동 활용이나 개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³ 접속권한 보유자, 즉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권한 승인을 득하면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급받게 되며, 권한이 없다면 승인을 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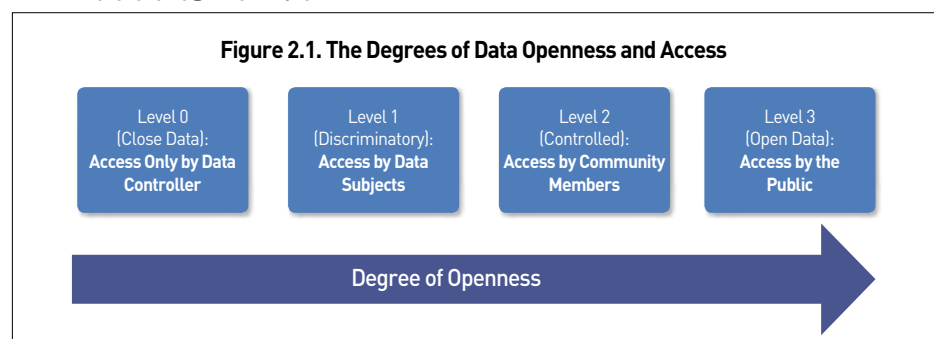
시스템 미사용자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넓게는 전체 국민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좁게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조직 또는 부문에 속하는 구성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제공은 데이터 개방(Open Data)이라고 하며,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데이터 기반 행정 차원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신청·조정·협의를 기본적 규칙을 의미하게 된다. 이때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을 수립하는 관리체계 및 프로세스’를 의미한다(OECD, 2019). 데이터 기반 행정이 주로 사용자로서 정책결정자와 공무원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반 시민의 공공데이터 접근성·가용성과 관련이 있다. 공공데이터의 정부 부처 간 공동활용에서 나아가 시민사회로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이는 시민의 공공정책 참여 증진은 물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2 _____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준

아래의 그림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준을 잘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OECD, 2019). 0단계는 가장 폐쇄된(Close Data) 차원으로 개별 업무 단위에서 접속권한을 통제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1단계 선별적 데이터 접속(Discriminatory)은 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해 데이터 개방 범위를 영역(Subject)별로 차등하는 방식이다⁵. 2단계 접속 통제(Controlled)는 시스템 로그인 ID가 없는 조직 구성원이라 할 지라도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데이터 요청자가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

그림 1. 데이터의 개방도와 접속 수준



자료: OECD(2019),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Data

는 권한을 부여할지를 관리자가 통제하는 유형이다. 마지막 3단계는 데이터를 개방(Open Data)하는 것이다.

OECD의 구분에 의하면, 1단계는 각 시스템 내부 정보계를 통한 유통, 2단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해당하며, 3단계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접속 수준은 데이터가 가지는 개방도(Openness)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0단계 수준, 즉 폐쇄된 상태에서 다루어지는 이슈이다. 즉, 적절하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된 정보에 대해 보안 수준을 감안해 어느 수준으로 개방할지 결정하게 된다. 시스템 사용자 사이에서만 공유되어야 하는 정보라면 1단계, 즉 선별적 접속만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직 구성원 전체가 봐도 무방하지만 대국민 공개가 어려운 정보는 2단계 접속통제 수준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전체 대중에게 공개되어도 무방한 정보만이 개방 대상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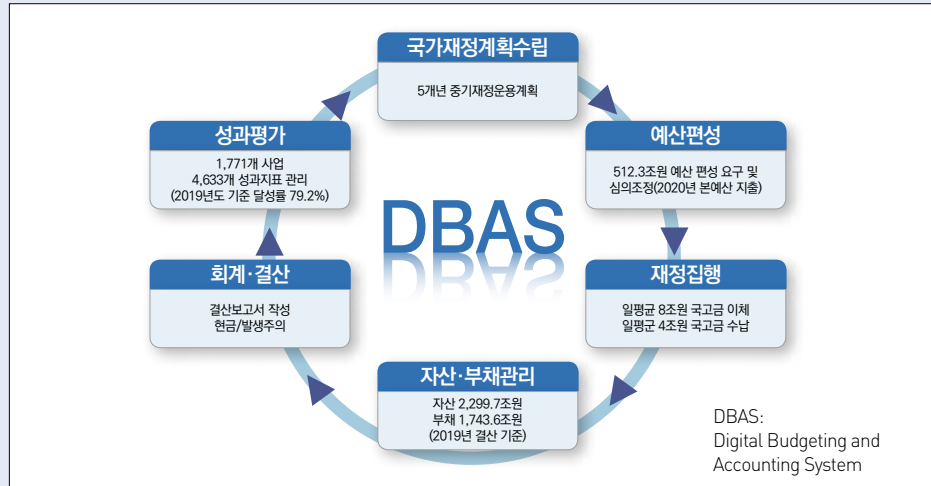
데이터 관리체계 및 프로세스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공공데이터의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시민사회로의 개방을 장려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가 기본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각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들이 높은 활용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개별 법령에 의해 활용과 개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데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각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돼 호환 및 공동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3 ————— 재정 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dBrain을 중심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재정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개별 법률이 정한 업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dBrain의 특징인데, 이는 ① 개별 법령이 정한 업무의 중복요소를 최소화하여 재정업무 수행을 효율화하고, ② 각 재정 업무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하며, ③ 대국민 공표 정보의 생산을 일원화하여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목적이 있다.

5 정보 시스템 내에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트(Data Mart)를 구성하고 로그인한 사용자별로 볼 수 있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dBrain의 통계분석 기능인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2. dBrain 시스템 개요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의 데이터 유통을 위한 거버넌스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dBrain의 재정정보 거버넌스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폐쇄적 권한 관리 및 접속 통제

기본적으로 dBrain은 폐쇄형 시스템이며, 데이터에 대한 접속통제도 강한 편이다. 운영지침을 보면, 개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별로 접근할 수 있는 화면을 달리 구성해 제공하며, 운영총괄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⁶.

2) dBrain 정보유통 내부 거버넌스

현행 dBrain 운영지침은 시스템 운영방향에 정책개발 지원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⁷. 정보 활용은 지침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정보와 관련된 사업 부서의 장이 하되, 정보의 생성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장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한 정보의 추출은 재정정보원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른 시스

⁶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의 경우는 기본적 관리는 고용정보원이, 사용자 계정 및 권한 부여 관리는 접속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⁷ 제5조(시스템 운영방향) 시스템 운영은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다. 2.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통계의 생산·제공 등 정책개발 지원.

⁸ 다른 시스템의 경우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요청에 대해 자료를 입력한 기관이 자료 제공 여부를 직접 결정(고용안전정보망 등)하거나, 시스템 운영 총괄 부처에서 결정(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하도록 하고 있다.

템과 비교해 평가할 경우,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 여부를 정보 제공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분산적이지만, 절차를 재정정보과 및 재정정보원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집권적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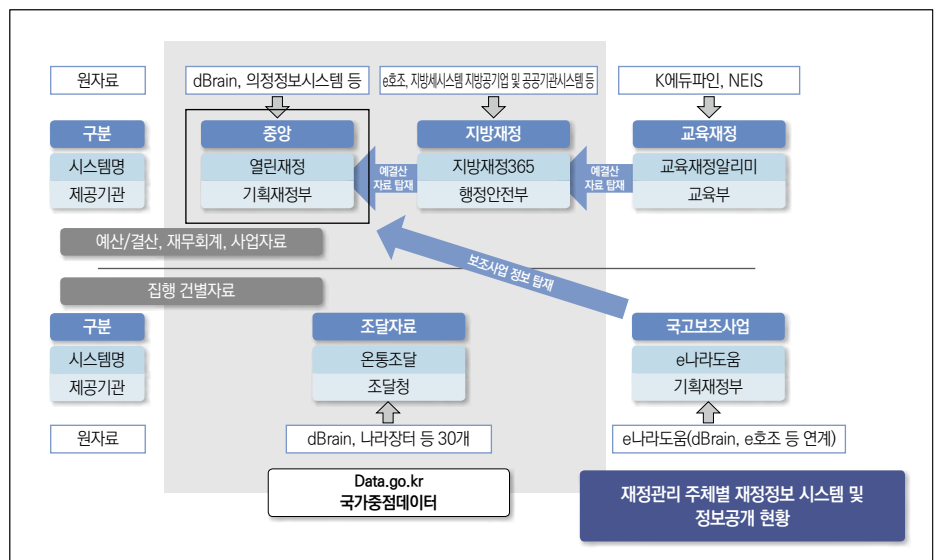
3) 공공부문 데이터 연계 거버넌스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업무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정보 외에 dBrain으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dBrain은 재정업무 특성상 타 기관의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연계 부분의 관리가 운영계에서 중요하다. 다만 dBrain의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상 운영계가 아닌 정보계에서 연계자료의 활용과 제공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의사결정을 위한 연계정보 활용은 그 근거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다. 예를 들어, dBrain의 국유재산 대장 관리 업무는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 작성·공표업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연계 활용하고 있지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 활용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4) 재정정보 공개·개방의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이 서로 분리되어있다. dBrain 시스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구축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은 e호조 시스템이 별도 구축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관리를 위한 K에듀파인 시스템 역시 별개로 존재한다. 현행

그림 3. 재정관리 주체별 재정정보시스템 및 정보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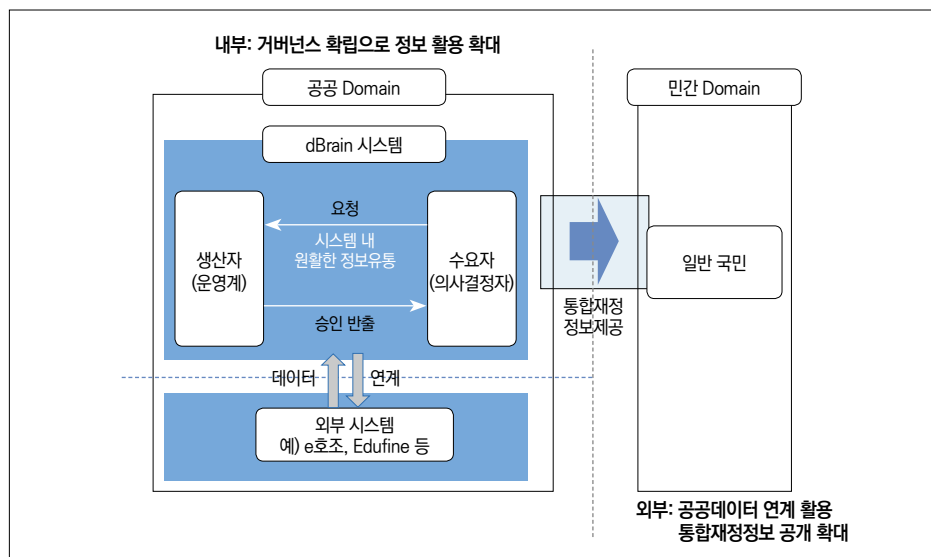
자료: 박정수(2018),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재정정보원 분석보고서 18-1

법 및 각 시스템 운영규정 상으로는 개별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연계해 통합재정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4 차세대 dBrain과 재정정보 거버넌스

요약하면 현행 dBrain을 둘러싼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는 △시스템 내적으로 폐쇄적 정보관리 △외적으로 현재 연계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 및 공개 부족 △중앙·지방 재정관리 거버넌스 분산으로 인한 통합 재정정보 생산 및 공개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dBrain 재정데이터 거버넌스는 분산된 재정관리 거버넌스를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dBrain의 정보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도 dBrain의 거버넌스 재구축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 차세대 dBrain의 주요 목표를 △의사결정 지원 기능 확대 △재정정보 공개 강화 등으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의 연계 활용 강화와 dBrain 재정정보의 개방 확대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차세대 dBrain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잡은 것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97조의2제3항)을 넣는 등 재정 분야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 차세대 dBrain 재정정보 거버넌스의 방향



자료: 기획재정부(2019),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현재 차세대 dBrain 재정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 방향은 크게 ① 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통합재정정보 생산 ② 데이터 활용지원체계 구축 등 2가지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정보 유통 절차 등이 크게 개선되어, 정보 활용이 증진될 전망이다.

1) 외부 시스템 연계 강화와 표준화

현행 dBrain은 정보 활용 측면에서의 연계가 다소 미흡하여, 국가재정이 중앙·지방·지방교육·공공기관 등을 망라한 통합재정통계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dBrain으로 생산되는 정보만을 관리하는 탓에 외부 자료를 활용한 복합 분석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차세대 dBrain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e호조 등 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재정정보 산출 과정을 효율화하고, 생산에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외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행·재정 지표를 dBrain으로 연계함으로써 dBrain에서 생산되는 재정자료와 결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2) 데이터 활용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내부 활용을 위한 정보계 설치 및 외부 연계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이다. 이 체계는 크게 △데이터의 품질 △메타 정보의 관리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데이터 품질은 사용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데이터 신뢰도로 직결된다. 메타 정보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떠한 자료인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데이터의 원래 의미를 알려주어 데이터의 오용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한다. 데이터 품질 관리와 메타 데이터 관리는 궁극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차세대 dBrain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처럼 품질 관리 및 메타 데이터 관리를 위한 지침 등의 수립과 관련 절차 확립을 통한 활용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Dener, C. and S. Y. Min(2013),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nd Open Budget Data: Do Government Report on Where the Money Goes? World Bank Study
- OECD(2019), Enhancing Access to and Sharing of Data: Reconciling Risks and Benefits for Data Re-use Across Societies
- 기획재정부(2019),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 박정수(2018),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재정정보원 분석보고서 18-1



주요 국가의 데이터 거버넌스 동향과 시사점

지은초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anncho@kpfis.or.kr)

Data Governance



역사적 대전환기에는 국가별로 승패와 부침이 갈리게 마련이다. 이번 전환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사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로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요소, 예를 들어 노동, 자본, 광물처럼 데이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도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데이터는 있다고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것에 각국이 눈을 뜬 셈이다. 미·중·EU 등이 데이터 패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도 결국은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 즉 데이터 거버넌스를 향한 경쟁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OECD 및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 거버넌스 동향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 데이터 거버넌스의 등장

디지털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재정을 관리하며,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정책 접근 방법 또한 아날로그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거쳐, 디지털정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정부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설계·전달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OECD의 디지털정부전략위원회의 권고사항¹과 같은 국제적인 의제가 대두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공개, 데이터 기반 제도 마련(데이터 3법 등), 디지털 뉴딜과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OECD는 총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2년(2018~2019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OECD 디지털정부 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의 결과를 발표했다.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를 기록해 높은 디지털정부 성숙도 수준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DDPS)는 기획, 집행, 평가 등 정책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성과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며, 디지털정부를 구현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¹ OECD(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

정책 전반에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진정한 데이터 기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OECD는 ① 데이터를 주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정의하며, 영향을 측정할 것 ② 데이터의 관리·공유 및 재사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③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정부 정책 및 서비스의 설계·제공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④ 데이터 공개와 정부 조직 간 데이터 사용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⑤ 윤리적 행위,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이해할 것 등 5가지 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 정부 수립을 통한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세스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2 OECD가 제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공통모델

OECD는 데이터 기반 정부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정부와 공공데이터 연구를 바탕으로 OECD가 그려낸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기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로, 전략, 전술, 전달의 3개 핵심단계와 6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OECD의 데이터 거버넌스



자료: OECD(2019), The Path to Becoming a Data-Driven Public Sector,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1) 전략 단계(리더십과 비전) 전략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전체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리더십과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리더십 역

할 확립은 정책목표 달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행정 구조에 데이터 관리 리더십 역할을 부여하거나, 태스크포스의 형태의 리더십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부의 역할 및 목표를 정의해야 한다.

2) 전술 단계(일관된 구현, 법률 및 규제) 전술 단계는 데이터 기반 정책을 일관되게 구현하고 조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데이터 관련 정책 및 전략,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로, 정부의 데이터 운영 및 정책의 조정 기관과 강력한 기관 간 네트워크, 데이터 기술 역량 구축, 협업 및 지식 공유 방법 등을 관리한다. 또한 데이터 관련 법률과 규정 등 적절한 규제 체계를 통해 데이터의 개방, 보호 및 공유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규칙을 정의한다.

3) 전달 단계(데이터 가치 순환,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아키텍처) 전달 단계에서의 데이터 가치 순환은 데이터의 생산, 개방,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를 다룬다. 데이터 인프라 및 아키텍처 부분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기술적 측면이 가장 두드러진다. 데이터 기반 정부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을 통합하기 위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기술적 처리도구를 개발한다.

3 ————— 주요 국가의 데이터 거버넌스 사례

OECD는 공공부문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수립·활용하고 있는 OECD 국가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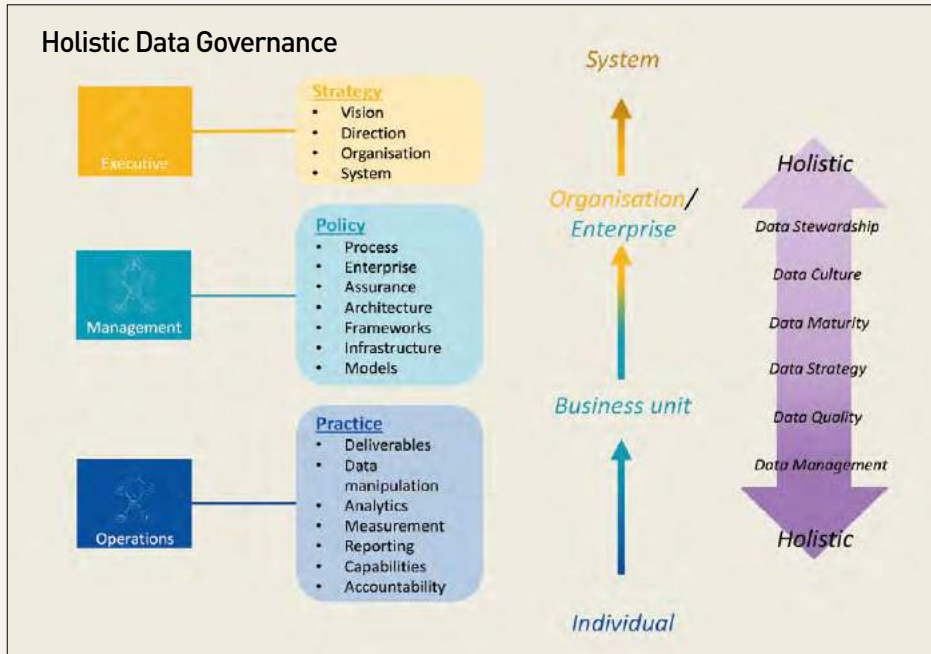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데이터 거버넌스

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은 데이터와 정보자산의 관리를 위해 기업 정보 관리(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EIM)의 원칙과 ‘전체 데이터 생애주기 접근 방식’을 활용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전략적 비전, 방향, 조직, 시스템을 확립하고, 관리부서는 정책의 프로세스, 체계, 인프라 등을 수립한다. 운영부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물, 처리, 분석, 보고, 기능 등을 다룬다. 각 부서들은 데이터의 설계, 생산에서 저장, 공개, 폐기까지 데이터 전체의 생애주기

를 이해하고, 데이터 관리, 품질, 성숙도 및 책임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그림 2. 뉴질랜드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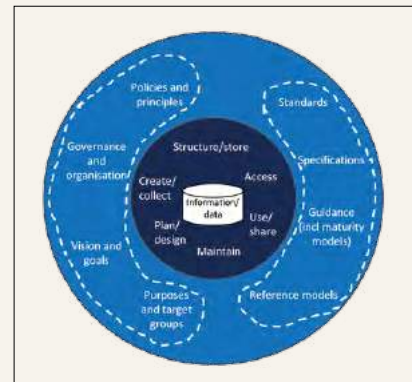
자료: OECD(2019), The Path to Becoming a Data-Driven Public Sector,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노르웨이의 데이터 거버넌스

노르웨이에서는 정보관리를 위해 행정관리 및 전자정부청(The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and eGovernment: Difi)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노르웨이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정보 및 데이터와 이를 통해 움직이는 생태계(생산·수집, 계획·설계, 유지, 사용·공유, 접근, 저장)를 중심으로 있다.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정책과 원칙, 거버넌스와 조

그림 3. 노르웨이의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모델



자료: OECD(2019), The Path to Becoming a Data-Driven Public Sector,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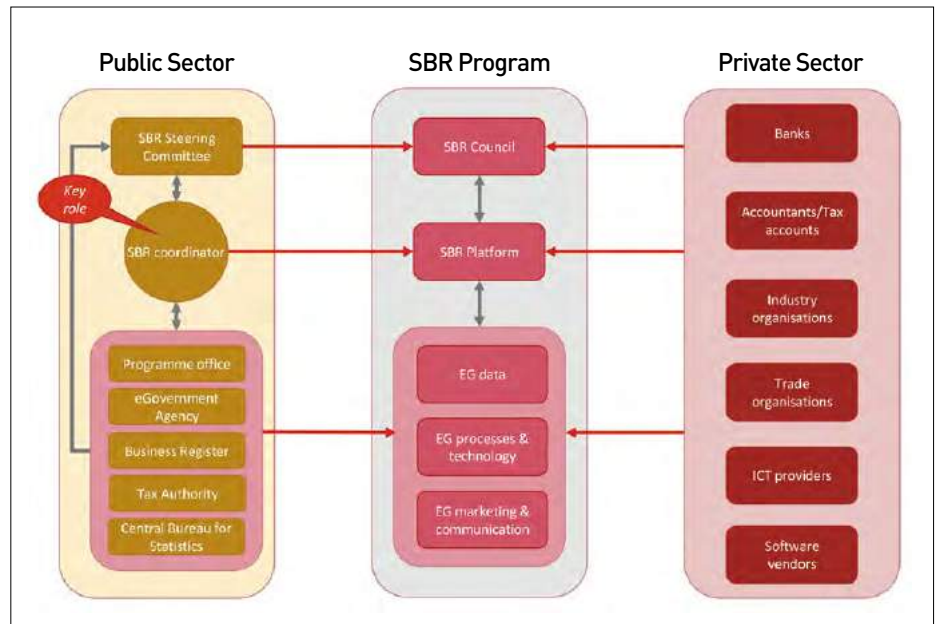
직, 비전과 목표, 목적 및 대상 그룹을 설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 규격, 지침을 수립한다. 노르웨이 행정관리 및 전자정부청은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데이터가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세트 및 디렉터리에 대한 지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정부의 공개 데이터에 대한 지침(라이선스, 공개 형식 등)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데이터 거버넌스

네덜란드에서는 공공-민간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했다. 표준사업신고제(The Standard Business Reporting: SBR)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부문인 정부와 민간부문인 은행, 사업체 등의 사업정보를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정의한 공통 데이터 분류항목에 따라 공공-민간부문의 데이터를 정의 및 표준화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했다. 덕분에 정부와 민간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행정적인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위한 디지털정부 서비스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4. 네덜란드 표준사업신고제의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



자료: OECD(2019), The Path to Becoming a Data-Driven Public Sector,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4 _____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시사점

데이터 기반 정부가 수립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게 설정될 수 있다. 먼저, OECD는 데이터 기반 정부의 거버넌스가 가져야 할 주요 요소들이 포함된 포괄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했다. 전략·전술·전달의 핵심단계별로 데이터 기반 정부가 정책의 전반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을 보여주었다. OECD가 권고한 체계를 참고하게 되면, 초기 데이터 거버넌스 설정 시보다 효율적으로 거버넌스 수립이 가능하다.

뉴질랜드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업정보관리 체계와 데이터 생애주기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 관리 주체와 각 단계에 위치한 모든 관리자들의 데이터 생애주기(설계, 생산, 저장, 공개, 폐기)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데이터 관리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체계는 정책의 집행, 관리, 운영부서의 데이터 성숙도를 높일 수 있으며, 모든 업무단계에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

노르웨이의 사례에서는 데이터 생태계 단계별로 나타나는 정보가 정부의 정책 수립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정 부서(행정관리 및 전자정부청)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의 사용에 있어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다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준비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례를 살펴 보았다. 공공-민간부문에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데이터 정의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정부 간 거래(B2G), 정부-기업 간 거래(G2B) 등 민간부문과의 데이터 교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덜란드의 거버넌스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직, 정책부문, 그리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실정에 맞는 적절한 거버넌스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OECD는 공통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유연성과 확장성을 언급했다.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앞에서 정부는 데이터 제공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입장에도 직면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조직별 수준에서는 조직 내 부서 혹은 기관 간 등 조직의 경계를 넘어 조직의 외부에서 데이터 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건, 재해, 지리 등 서로 다른 정책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등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분야 및 정책에 있어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유연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다층적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부문 데이터의 활용과 같은 공공 및 민간부문 간 데이터 공유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기반 정부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시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부기관 및 분야별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데이터의 통합·공유 방안을 고민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재정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술 구현과 함께 재정 관련 데이터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 간 데이터 공유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범국가적인 데이터 수집, 처리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다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보의 공유 및 공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OECD(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
- OECD(2019), The Path to Becoming a Data-Driven Public Sector,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홍종현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johneyhong@gnu.ac.kr)



1. 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소위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축약되는 D.N.A. 생태계(Ecosystem)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전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5G, AI를 활용하고 융합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일자리 56만 7천여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Open Data)과 아울러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로 변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스마트 시티 등 신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연계·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데, 정부는 2019년 말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감독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의 제공·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20년 10월 6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제97조의2 제3항 신설)하는 것이다.



2. 데이터 관련 법제의 변화와 그 파급효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을 2020년 6월 9일 제정하였고, 이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는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기관장은 데이터 관계도 등 관리체계(법 제16조)를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데이터 분석센터(법 제20조)를 설치·운영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관리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 상호 간의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통합·연계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법 제18조)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이 2020년 12월 말부터 시행되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제공 요청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최근에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중 국세 및 지방세와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정보를 전송대상 정보로 명시하여 관련 데이터를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세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각종 재정정보를 요청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 나타날 것이고, 한국재정정보원 측에서도 단순히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월별 재정통계를 작성·게시하면서 재정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하여도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재정정보와 연계·분석·결합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정보와 행정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재정사업의 성과 등을 확인·검증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이 요청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9년 1월 14일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에 대한 법률(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이 대통령의 서명·공포를 통해 발효되었는데, 이는 각 정부 부처와 행정청 등이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데이터 공유·연구·분석을 위한 연간계획을 제출하고, 정책과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평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연구를 하는 전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 사항은 주로 개인정보(Privacy) 보호 기술 및 법제도와의 충돌·모순이 생기는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 받은 범위에서 활용 가능하고(엄격한 제한), 수집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이 역시 추가처리의 목적과 당초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수집한 정황 및 처리관행의 예측가능성, 추가처리의 정보주체나 제3

그림 1.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신설

- 가명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 ⇒ 추가정보의 분리 및 보관, 가명정보 처리 내용의 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방법 마련



【 안전조치 의무 】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분리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부관리 계획 수립·시행



【 기록 및 보관 의무 】

-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추가정보의 이용 및 파기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 보관



【 파기 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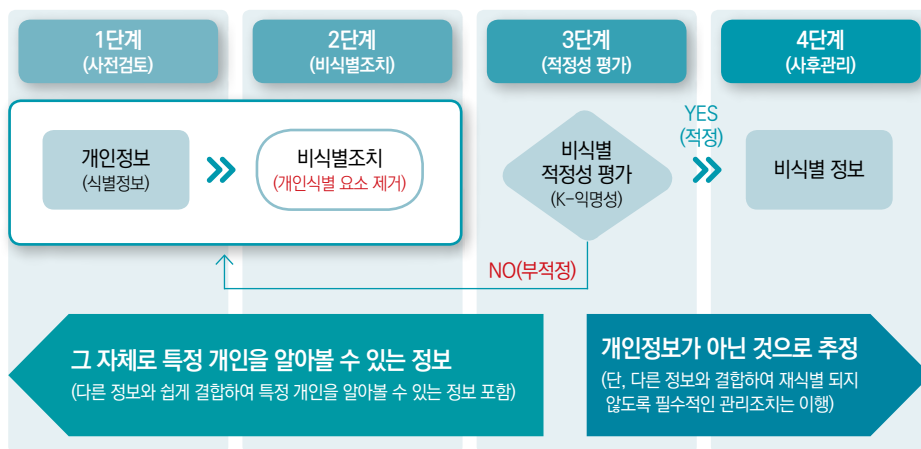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자의 이익에 무해성, 가명처리로 추가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가명처리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핵심은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그리고 이를 위한 전자적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법 제28조의2),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서 수행(법 제28조의3)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¹.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처리 가이드라인」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등을 마련하고, 그 산하에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두고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합전문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반출심사위원회'에서 가명정보 반출의 승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행 고시의 해석상 전문기관 내에서 데이터의 자체결합은 허용되지 않고, 향후 관련 법령 분석 및 추가적인 보안조치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체결합 허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²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자체결합 수요 조사 및 추가 연구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비식별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¹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제3항).



4. 결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데이터의 공유·연계 및 활용의 장애물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성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적절하게 공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침해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가두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재정정보의 객관성과 유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무결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데이터와 행정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적 관점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통계자료가 생성, 축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Sustainable Data Management)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관리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 상호 간의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무결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의 객관성, 무결성, 가용성 등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담보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올바르게 적용·시행하는 것이 향후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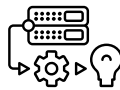


- 2 2020년 8월 26일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년 9월 16일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연 장공고한 바 있는데, 그 신청요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에 상세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는 조직,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 등 요건이 구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은 지정될 수 없다. 참고로 현행 기준에 의하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자본금이 5백만원에 불과하여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또한,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5조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보관 주기, 이관, 폐기에 대한 (데이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기재부) 재정정보과장은 재정정보원이 수립한 데이터 관리정책 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그치므로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관리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발전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생활 속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김영미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young@sm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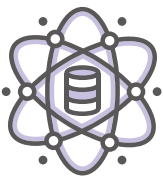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매년 열리는 가전·IT 쇼로 전자기술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전시회로 평평이 나 있다. CES는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실험의 장으로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CES 2020’의 화두는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인공지능(AI)이었다. 아마존의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에서 시작하여 우리 생활 속 곳곳에 파고드는 디지털화된 기기들의 접촉은 더 이상 낮설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데이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기기 제어나 음악 감상 등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되던 AI는 2020년을 기점으로 더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며 일상생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기사화하였다. 지능화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장성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진단기기 등은 물론 미래 자동차인 자율주행차를 통해 더 가깝게 와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인공지능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최적화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서비스의 시도들을 보면 그 내용과 방법이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 수요 차원에서 주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정책 플랫폼을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책과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무엇보다 공공이 보유한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도모하는 등 학습데이터 활용을 통한 민간 서비스 지원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지역공공재의 주민자산화라는 새로운 접근법도 시도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보 및 개선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민간시장의 확장, 지역별 특화산업의 활성화로 연결시키고자 하며, 나아가 맞춤형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도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가 공공시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형 데이터의 구축, 데이터 포털 및 인공지능 플랫폼의 도입 등 다각적인 접근법이 제안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의 변화가 예상된다. CCTV를 활용한 안심귀가, 교통정보, 주·정차 단속 등의 서비스는 물론 무인기기 활용 서비스, 사회인프라 관리 서비스 등이 이미 반영되고 있거나, 중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자가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알고리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므로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주요 경쟁 원천이 된다. 여기에 스스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반은 데이터이다. 머신러닝을 통한 인공지능의 새로운 영역 확대는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머신러닝의 대량의 데이터 수집은 최종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팬데믹(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였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K-방역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은 마스크 재고 알림 앱, 확진자 동선 알림 앱,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문자, 자가격리자 관리 앱 등이 실제 활용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스마트워크 등 비대면 업무, 화상을 이용한 원격교육, 원격의료,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된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계가 상향조정되면서 공중시설의 이용 시 개인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작성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의 정보는 “저 보호되고 있나요?”에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세심한 정책적 배려도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는 점점 더 방대하고, 다양하고,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며,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적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에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에 반영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거나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2020년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와 정책이 정비된 시기이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별 실천적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2020.1.9.)하여 개정(2020.2.4.) 및 시행(8.5)에 이르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의미한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2020.6.9.)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체계의 대처에 대한 요구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제정(2020.6.9.)이 갖는 의미를 보면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공공부문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줄 증거기반 및 정책기반의 강화가 요구되며, 무엇보다 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인사체계의 확립,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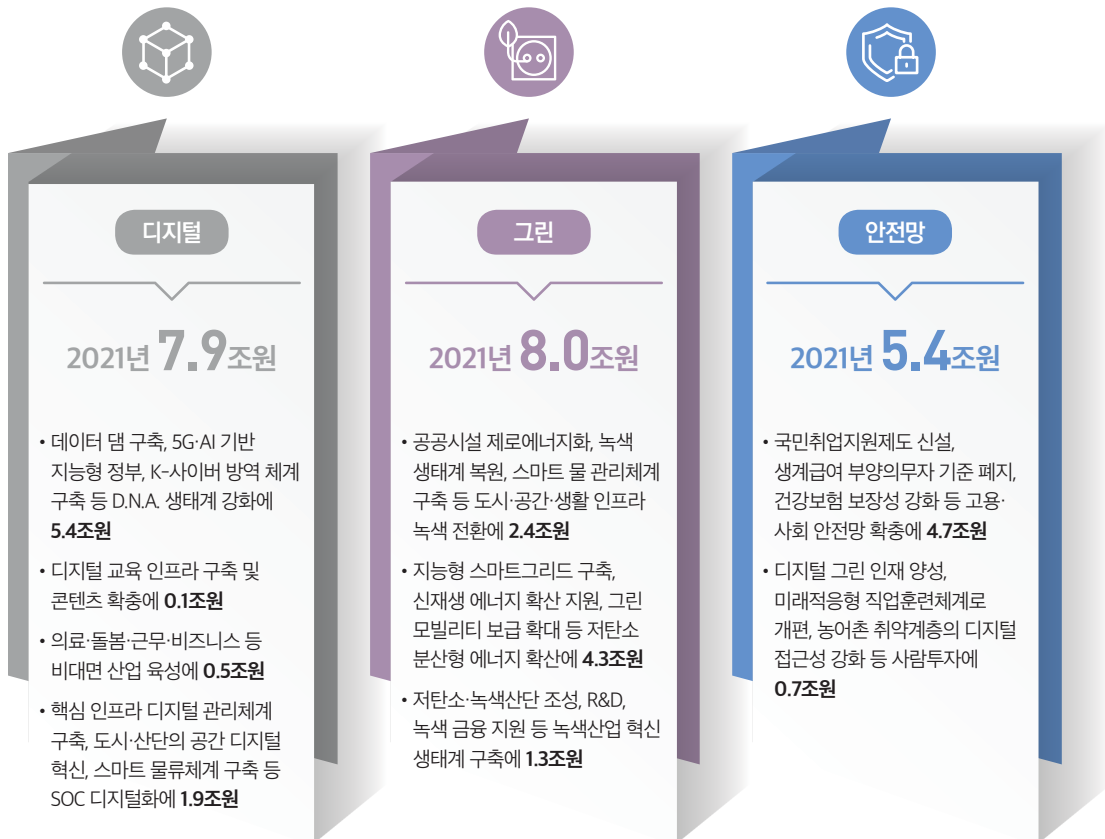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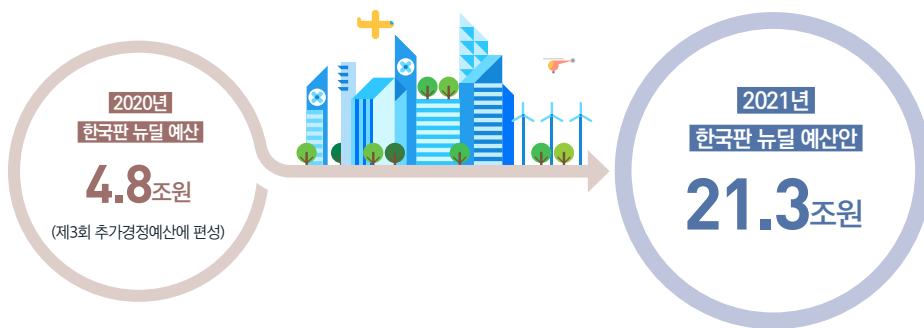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술 자체의 개발보다는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의 융합, 특히 빅데이터와 AI의 융합은 모든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기술의 진화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법과 제도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수용하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윤리의식의 확산도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사회적 포용의 확대, 디지털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정보의 지원체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 생태계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의 새로운 접근과 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기반의 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윤리 거버넌스의 인식 확산,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안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1 데이터 댐

'20~'25 15.5조원 → '21 2.8조원

-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0.3조원) 및 의료기기안전 등 4.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0.2조원)
-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시바우처 200개사 지원(560억원)
- VR·AR·IoT 기반 전시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국공립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전국 113개소 구축(366억원)



2 지능형(AI) 정부

'20~'25 9.7조원 → '21 0.8조원

- 전자소송, 국가보조금 연금 맞춤형 안내 등 57개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0.4조원)
-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133억원)
- 10개 기관 5G 국가망 시범구축(205억원), 행정기관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600억원)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25 0.1조원 → '21 0.06조원

-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누적 1,000개소, 500억원)
- 토종 Si의사인 닥터앤서의 분석기능 강화(8→20개 질환, 50억원)



4 그린 스마트 스쿨

'20~'25 3.4조원 → '21 0.1조원

- 519개 초·중·고 노후건물(BTL 물량 포함 715동)을 에너지 절감 및 온·오프 융합형 교육환경으로 전환('25년까지 총 2,835동)
-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Wifi,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보급



5 디지털 트윈

'20~'25 1.5조원 → '21 0.3조원

- '22년까지 국도의 100% 구현을 목표로 정밀도로지도 제작(160억원)
- 공동구, 상·하수관 등 15종 지하구조물 3D 지도 구축(406억원)
-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62억원)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20~'25 10.0조원 → '21 2.4조원

-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0.6조원), 철도 62%에 IoT 설치(0.3조원), 국가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0.2조원)
-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68억원)



7 스마트 그린 산단

'20~'25 3.2조원 → '21 0.7조원

- 7개 산업단지에 ICT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40억원)
- 소규모 사업장(3,000개소) 시멘트 업종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0.5조원),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 클린팩토리(250개소) 구축(441억원)



8 그린 리모델링

'20~'25 3.0조원 → '21 0.7조원

- 노후 공공건축물(1,085동), 공공임대주택(8.2만호) 대상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0.6조원)
-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역에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원)



9 그린에너지

'20~'25 9.2조원 → '21 1.3조원

- 3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관련 기술 부품 개발지원센터 구축 등(145억원)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보조 보증 용자 확대(1.0조원)
- 수소생산-활용 쉼주기 원천 기술개발 및 수소도시 3곳 조성(77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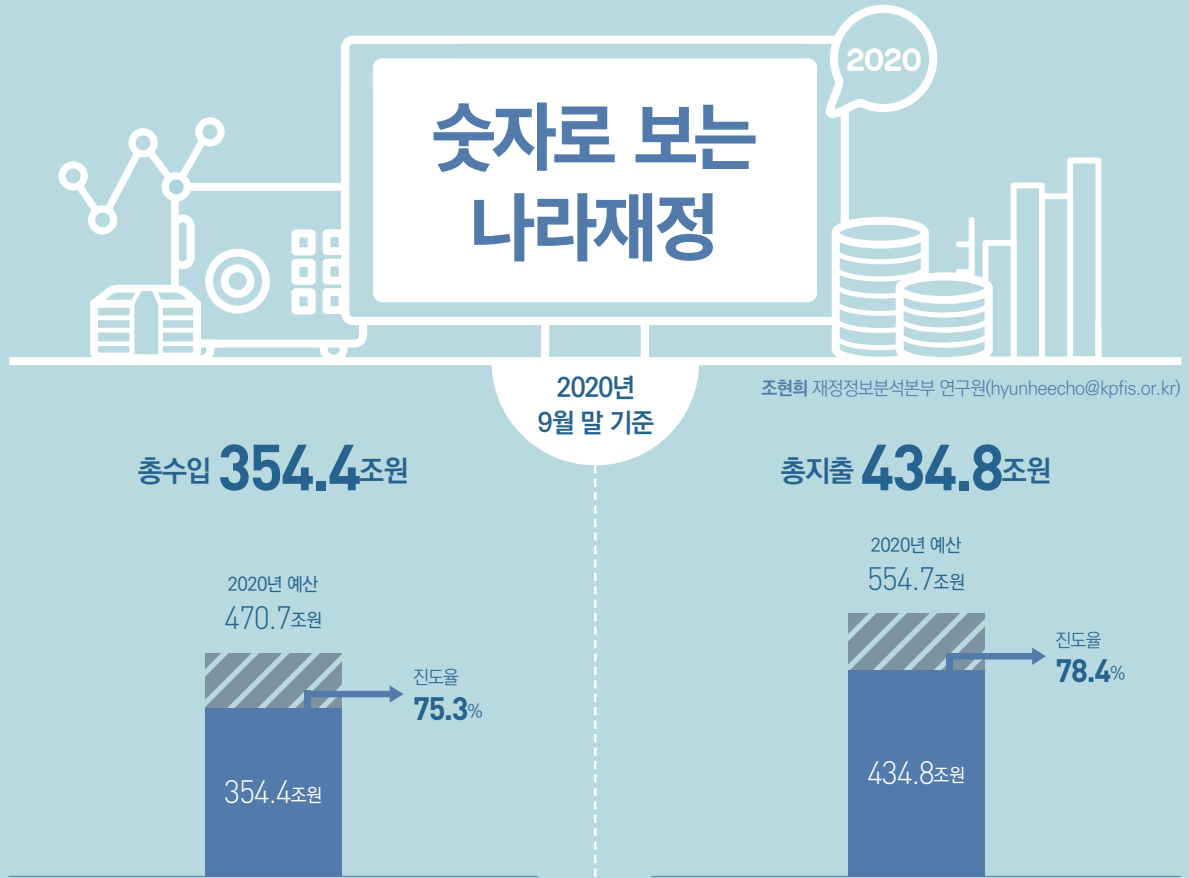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25 13.1조원 → '21 2.4조원

- 전기·수소차 11.6만대 보급(1.6조원), 노후 차량 3.2만대 친환경 전환 및 33.2만대 조기폐차(0.6조원)
- 관공선 합정, 민간선박 26척의 친환경 전환 지원(0.1조원)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1년 예산안'을 기초하여 작성



주 1)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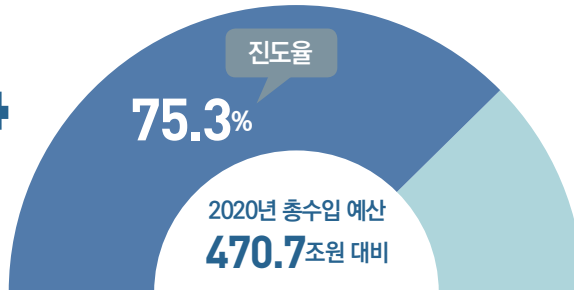
2)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11.

총 수입

• 2020년 9월 말 기준

총수입
354.4
조원



전월 대비
+36.6
조원

전년 동기 대비
-5.1
조원

주 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세수입

(단위: 조원)

279.7
214.7
세수진도율
76.8%

소득세
88.5
65.1
세수진도율
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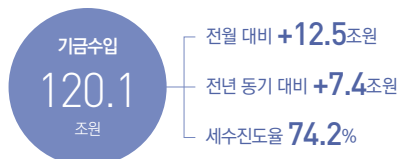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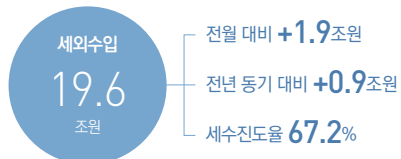
법인세
58.5
50.0
세수진도율
85.6%

부가가치세
64.6
47.7
세수진도율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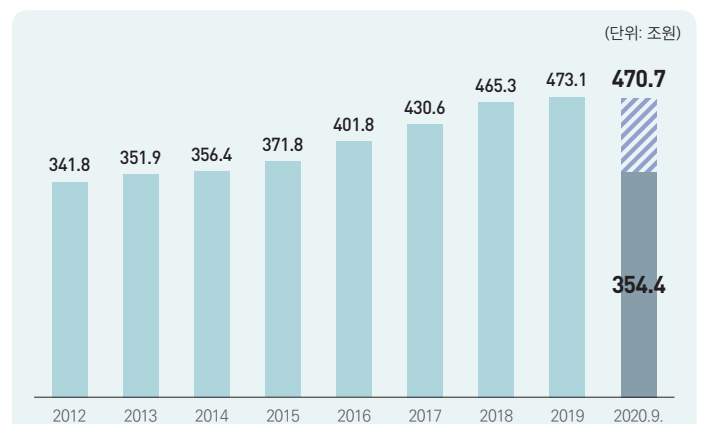
■ 2020년 예산
■ 2020년 9월

주 1) 세수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72.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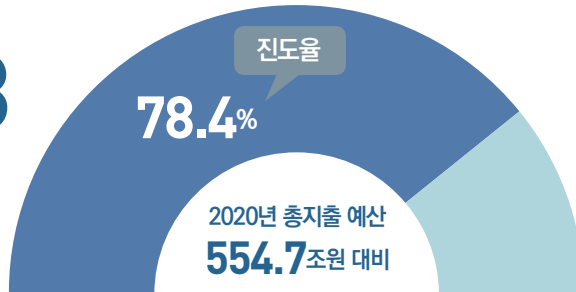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총 지출

• 2020년 9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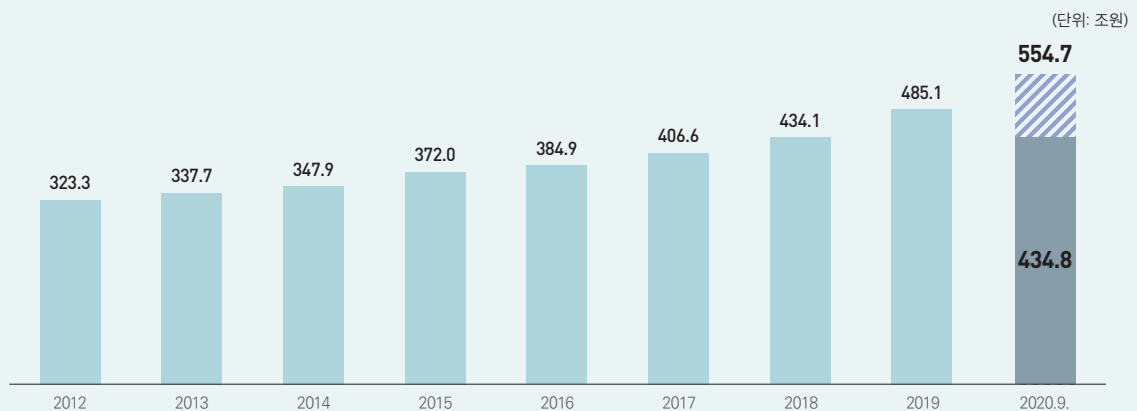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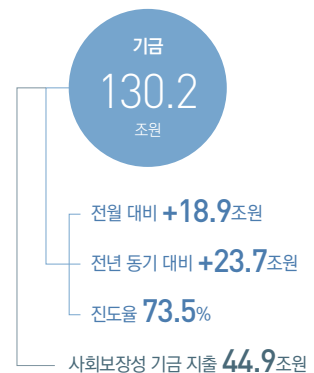
총지출
434.8
조원



전월 대비
+46.1
조원

전년 동기 대비
+48.8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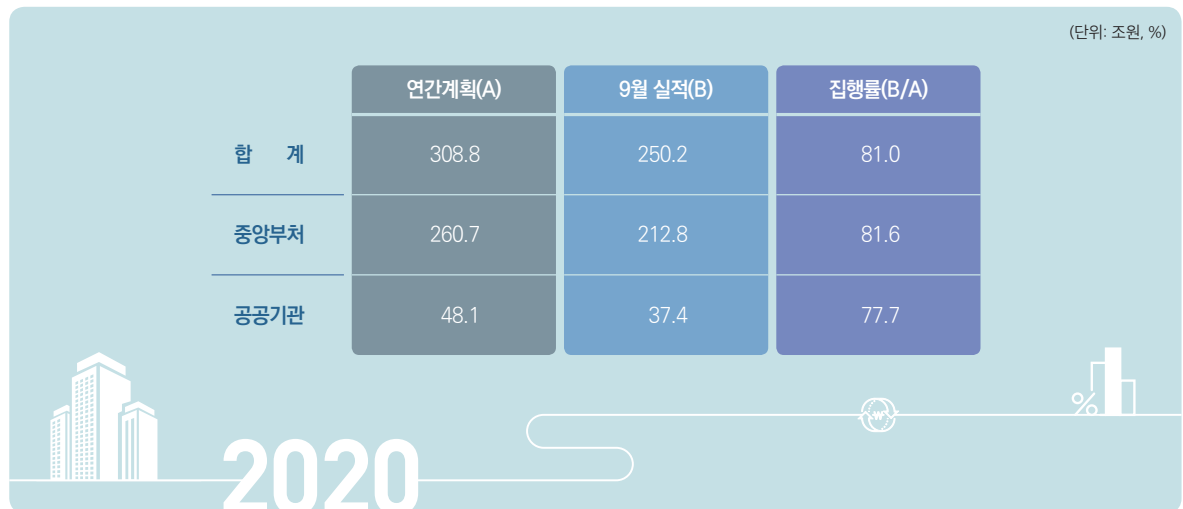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19년까지는 결산,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연간계획 대비 **81.0%**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부처명	9월 실적	집행률
1	고용노동부	6.0	96.1
2	산업통상자원부	7.2	90.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	88.6
4	보건복지부	18.5	87.5
5	행정안전부	41.7	87.2

주 1)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45개 중앙행정기관과 39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집행률은 해당 연도의 연간 계획 대비 당월 누계 실적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 2020년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80.5조원 적자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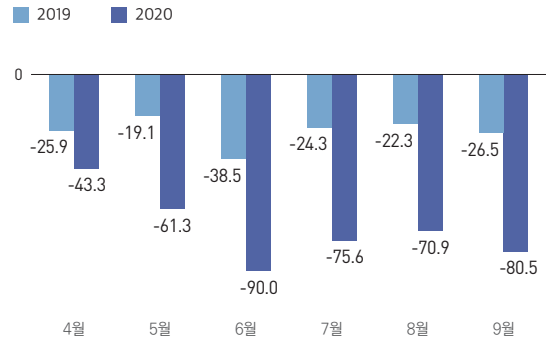
-9.6

조원

전년 동기 대비

-53.9

조원



관리재정수지

108.4조원 적자

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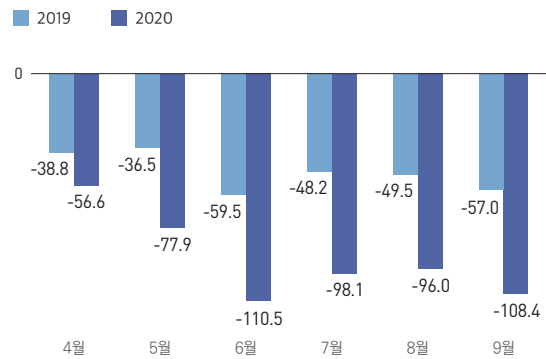
-12.4

조원

전년 동기 대비

-51.4

조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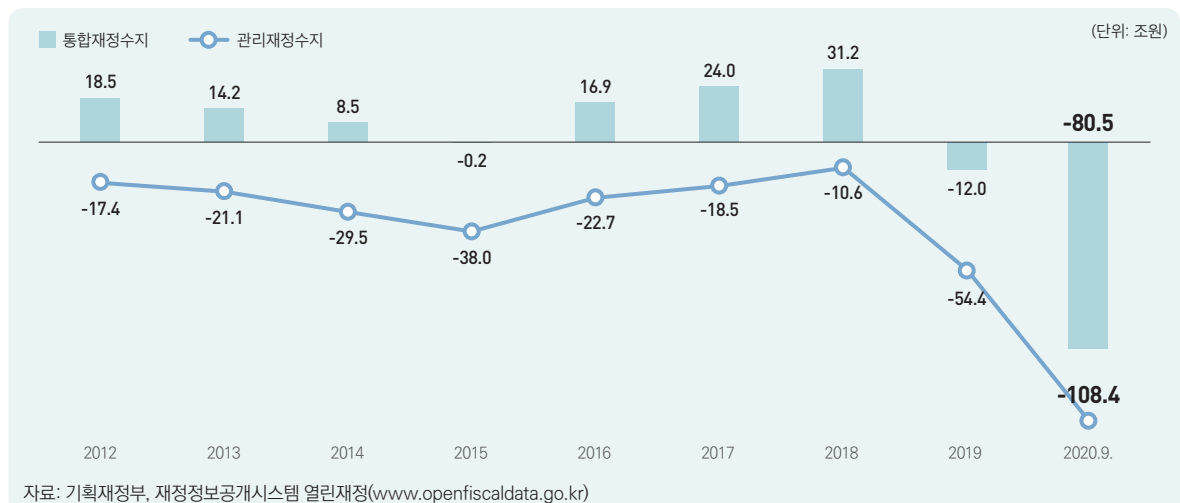
28.0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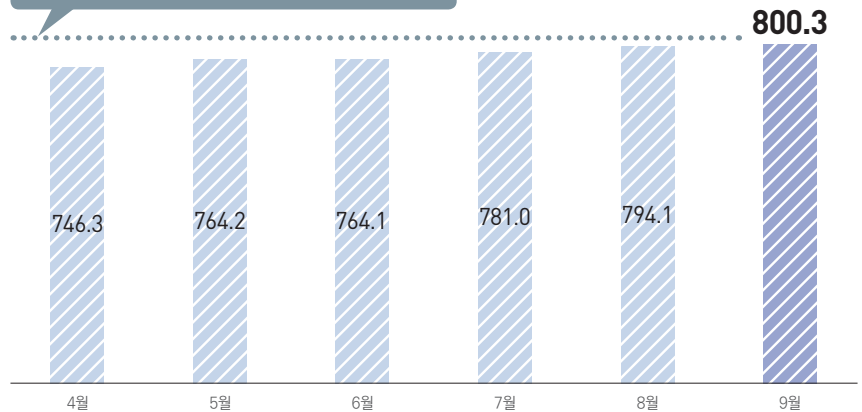
국 가 채 무

• 2020년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3조원

2020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814.9조원



전월 대비

+6.2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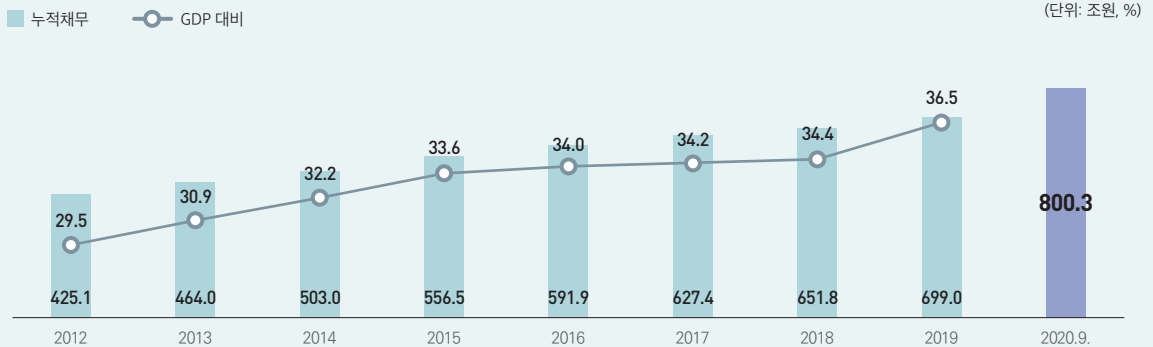
전년 대비

+101.4

조원

주 1)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함(2018년 국가채무는 680.5조원이며, 그중 지방정부 채무는 32.7조원임)
2) 2020년 예산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재정사업 성과평가

재정사업 성과평가란 개별 재정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해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꾀합니다. 정부는 성과목표 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 총 3단계에 걸쳐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최근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제도 소개 및 웹툰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주요재정제도 > 재정사업 성과평가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재정사업 성과평가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주요재정제도 >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목적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에 대해 단계별 대상사업과 내용, 추진내용(추진 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도표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 >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성과평가의 정의, 단계별 설명 등을 만화 형식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교실

재정웹툰

재정배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재정배움터

예산및기금

국유재산

연기금부채

국고

부채

국채

조세

파격집산

주요재정제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건전재정기조 정착 및 재정준중 조율조를 위하여 성과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 3단계의 재정 성과관리제도 실시(국가재정법 제8조 등)

※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성과목표관리제도(0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05년), 심층평가제도(05년)를 단계적으로 도입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체계>

	성과목표관리제도 (1단계, Monitoring)	자율평가 (2단계, Review)	심층평가제도 (3단계, Evaluation)
대상사업	전략 재정사업	원칙적 전략 재정사업	전략적 사업 등
내용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 · 지표 관리, 성과보고서상 목표달성도 측정 분석	계묘리트를 통한 점검	계묘리트를 통한 사업진행도 점검, 장일분석
추진내용	52개 부처 2000여개 단위사업	1000여개 단위사업	마지막 8개 단위사업

□ (성과목표관리제도) 매년 각 부처가 재정사업에
 - 자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목표지침
 -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달성도를 분석

□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
 - 단계별 지표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고

□ (재정사업 심층평가) 문제사업(남·비효율
 - 개별사업 또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2 통계 자료

상세재정통계DB > 성과평가 > 데이터자료 > 기금 자산운용 현황 성과평가 등 3건 
 상세재정통계DB > 성과평가 > 문서자료 >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등 5건 

상세재정통계DB > 성과평가 > 데이터자료에서는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도별 기금 자산운용 현황, 기금별 자산매분비중 현황, 기금별 투자율 예치비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기금 자산운용 현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금 자산운용 현황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각 기금별 자산운용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연도를 2019년으로 설정하면, 총 66개 기금별 규모(단기/중장기/전체)와 수익률, 그리고 총계 및 유형별¹ 분류에 따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 별 우측 상단에 있는 메타정보열기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세재정통계DB > 성과평가 > 문서자료에서는 각 부처별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보고서는 문서뷰어를 통해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서자료

기금 자산운용 현황

기금별 자산매분비중 현황

기금별 투자율 예치비중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대상연도: 2019

No	대상연도	기금명	단기(십억원)	중장기(십억원)	전체(십억원)	수익률(%)
1	2019	총계(66개)	0	0	785,868	3.02
2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3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4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5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6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7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8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9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10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11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12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13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14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15	2019	사회보험성기금(5개)	0	0	703,327	8.51

¹ 기금 유형에는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이 있다.

앞서 살펴본 문서자료는 열린재정의 재정자료실 > 재정 보고서·간행물 > 기금운용평가결과/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기금운용평가결과는 각 회계연도별(1999~2019년)로 보고서를 제공하며, 목차별 내용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도 마찬가지로 각 회계연도별(2008~2019년) 보고서를 제공하며, 소관별로 보고서를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정 보고서 · 간행물

기획재정부, OECD 등에서 발간한 국내외 재정 관련 보고서 및 간행물을 제공합니다.

통근·여행정보	통근·여행정보	예산·나라살림	기금운용평가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	경제동향
IMF	OECD	부담금추진현황		기타	

2019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기획재정부, 2020-08-01

총 19건

번호	제목	출처
19	2019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기획재정부
18	2018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기획재정부
17	2017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기획재정부
16	2016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기획재정부
15	2015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기획재정부

재정 보고서 · 간행물

기금운용평가결과 기

출처: 기획재정부, 발간일자: 2020-08-01

■ 목차정보

■ 목차

2019년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1. 서론(주요내용))
2019년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 기금운용평가결과)

소 (2019.08.01)
소 (2019.08.01)

재정 보고서 · 간행물

기획재정부, OECD 등에서 발간한 국내외 재정 관련 보고서 및 간행물을 제공합니다.

통근·여행정보	통근·여행정보	예산·나라살림	재정사업자율평가	경제동향
IMF	OECD	부담금추진현황	기금운용평가결과	기타

2019년도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2020-08-18

총 12건

번호	제목	출처
12	2019년도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11	2018년도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10	2017년도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9	2016년도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

2019년도 소관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출처: 기획재정부, 발간일자: 2020-08-18

■ 목차정보

■ 목차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서론부분)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서론부분)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서론부분)

소 (2019.08.18)
소 (2019.08.18)

재정통계 > 집행실적 > 월별집행실적 / 일별집행실적 > '재정사업평가' 검색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부사업 실행결과와 실적 집행실적을 제공합니다. 세부사업명을 선택하시면 사업별 실행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에 대부분이 미결이 지급되는 경우 등으로 집행실적액이 사업의 진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산내역 집행액 정보는 행정정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실적자료는 각 부처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 결산 마감 관계로 **매월 26일 이후** 잔액 실적이 제공됩니다.

회계연월	2020년 ▼ 09 ▼	소관	전체 ▼	과목	전체 ▼
분야	전체 ▼	부문	전체 ▼	세부사업	재정사업평가
항목	☒ 소관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검색조건지우
Q 검색

(단위:백만원) **액설자장**

회계연도	회계연월	소관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2020	09	기획재정부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재정관리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평가	1,512

* 예산내역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출 등 종반액

세무사업정보

※ 상세 조회하려는 항목표기 및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원문보기

다운로드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계정	분야	종류
코드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무사업
코드	2500	2544	300
명칭	재정관리	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평가

■ 예산인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률	사업구조 변경여부
		본예산	주경 (수정지출계회계)	본예산	주경 (수정지출계회계)		
재정사업평가	1,459	1,402	1,402	1,512	1,512	7.8	N

[illegible]

4 ————— 기타 정보

관련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 ‘성과평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검색

최근, 정부는 성과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강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의 거시적·전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성과계획서의 관리대상을 기존 단위사업에서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조정 하고, 성과평가의 부담 완화와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를 모두 추구하기 위해 제도별 평가대상 규모는 축소하면서,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를 체계화 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내 재정성과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색해 2020년 9월 1일자 보도자료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에 관한 그동안의 보도자료는 ‘성과평가’를 검색하시면 관련된 모든 보도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Q 검색

총 21건

제목	첨부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
2017년도 예산회계사업 성과평가 강령제 개편		기금사업과	2018-06-30	13
2017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추진		조세특례제도과	2017-01-25	8
제99차 복권위원회 개최(2017년도 복권발행계획)		발행관리과	2018-04-14	4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추진		조세특례제도과	2016-03-02	6
2016년 예산의 자질없는 집행을 위한 의견 수렴(국회)		예산관리과	2015-12-28	11
2015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추가 선정		조세특례제도과	2015-02-23	0
2015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1차 선정 결과		조세특례제도과	2014-12-31	0
연기금투자율 운영기관 선정기준 및 구간분류상 조		재정제도과	2014-08-27	13
(보도해명) 내일신문 2012.8.29(수) 「정부 FTA ...		통상정책과	2012-08-30	0
2011회계연도 국가재정 관리사무 성과평가 결과		국고과	2012-08-17	4
2011회계연도 국가재정 관리사무 성과평가 실시		국고과	2012-03-15	0
국가 R&D사업 성과평가, 투자 효율성 및 정책 성		성과관리과	2011-03-17	1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		성과관리과	2010-07-14	6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세종학당'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60여개 나라 180여곳에서 한글 우수성을 알리는 기관이다. 이런 언급량 상승은 574번째 한글날을 맞아 국민들이 한글 홍보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문화' 등이 도출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한국어의 우수성과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재정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세종학당



연관어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문화

세종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행사

국내

전세계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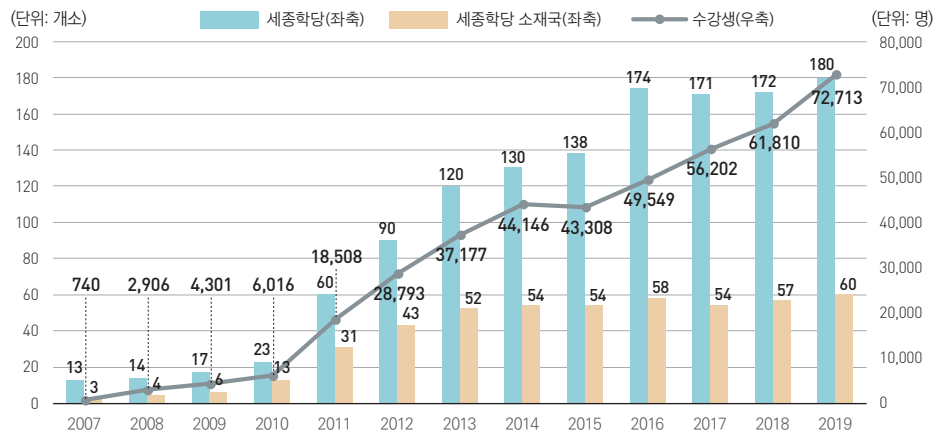
베트남

한국

학생

‘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해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07년 3개국 13개소였던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60개국 180개소로 크게 늘었다.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수업을 듣는 학생 수도 2007년 740명에서 2019년 7만 2,713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어를 제1언어¹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약 7천 7백만명이고, 이는 전 세계 언어별 사용인구 기준으로 14위에 해당하지만 이런 비약적인 수요 증가는 한류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세종학당 증가 추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한국어 확산계획(2020-2022)」 재구성

한류 효과 덕에 한국어능력검증시험(TOPIK)만 해도 해외 응시자 수가 2017년 12만 7천 명에서, 2018년 13만 8천 명, 2019년 15만 3천 명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는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의 활약에 힘입어 소위 ‘신한류’²가 확산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정부도 한국어 재정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해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확산 △대상과 목적에 맞는 한국어 경험 지원 △한국어의 접근성 향상 등을 사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예산안 기준)의 한국어 관련 주요 재정사업은 아래와 같다.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빅데이터 구축을 뺀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은 20% 이상 크게 늘렸다.

¹ 우리나라 국민, 재외동포 등을 포함하여 한국어를 모어로 쓰는 것을 의미한다.

² 기존 한류와는 다르게 한국 문화 전반에서 한류 콘텐츠를 발견하고,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력과 파급효과가 높은 한류를 의미한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주요 사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안	증감률(%)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45.2	43.4	-3.9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88.2	108.3	22.9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682.8	893.8	20.9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750.9	928.0	23.6

주: 총지출 기준(2020년은 최종예산, 2021년은 정부예산안)

자료: 기획재정부(2020), 「2020년 사업별 설명자료」, 「2021년 예산안」 재구성

▶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5.2억원과 43.4억원이 배정됐다. 텍스트 마이닝,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국어말뭉치(Corpus)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Corpus.korean.go.kr)를 통해 13종 18억 어절 분량을 제공하고 있다. 구축된 말뭉치는 표준어뿐 아니라 지역·연령에 따른 자료를 포함시킴으로써 인공지능이 이를 활용해 지역 방언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챗봇이나 인공지능 등은 이러한 말뭉치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한국어 처리능력을 높인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어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 언어자원 종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정부는 2021년도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사업에 올해보다 22.9% 늘어난 108.3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한국어교육 선진화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국어문화학교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 선진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지식 기반 마련과 교육 인적 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국어원을 통해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 △교원 자격제도 운영 △교원 재교육 등을 하고 있다.

둘째,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는 효과적인 국어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 언어의식 조사, 외국 인지명 한글 표기구축 등을 진행한다. 어문규범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국어 사용능력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한다. 국어문화학교는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과 여건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공무원·일반인 과정 △온라인 과정 등이다. 국어문화학교 홈페이지(oldedu.korean.go.kr)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사업(2021년 893.8억원, 전년 대비 20.9% 증가)은 △해외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학당지정 사업은 세계 곳곳에 현지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독립형³, 연계형⁴, 협업형⁵)의 세종학당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더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세종학당 운영지원사업은 현지 세종학당에 △한국어전문교원 △교재·한류 콘텐츠 △운영예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지 특성에 맞춰 교육환경을 꾸민다. 이런 세종학당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인 학당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글문화행사 지원은 매년 한글날 국내·외 다양한 한글 관련 행사를 펼쳐,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제574돌 한글날은 '2020 한글주간 누리집(hangeulweek.c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2021년 928.0억원, 전년 대비 23.6% 증가)은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재외 한국문화원 인프라 확충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 브랜드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으로 해외 현지 상황에 맞는 한국문화를 홍보하여, 한국문화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한국문화 종합행사를 열어 지속가능한 한국문화 확산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외 한국문화원 인프라 확충은 27개국에 위치한 문화원을 통해 국제문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원의 노후건물 개선이나 거점별 주요 도시 문화원의 단계적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 브랜드 사업은 현지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 사업내용은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K-POP 아카데미 운영 △한식문화교육 △한국문화가 있는 날 △한국문화체험관 운영 등 5가지다. 사업별로 각각 현지 수요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³ 독립형은 현지 운영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⁴ 연계형은 현지 운영기관과 국내 운영기관이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⁵ 협업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의 사회공헌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지원금을 교부받지 않고 운영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지역별 경제 현황을 검토하고 전망하는 지역 경제전망보고서 「Regional Economic Outlook」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월간 「나라재정」 11월호에서는 지난 10월 21일에 발표된 아시아·태평양(Asia and Pacific) 지역의 경제전망에 관한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코로나19 발병 이후, 2020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위축된 세계 경제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IMF는 2020년 세계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성장률은 -4.4%로, 2020년 6월 전망² 대비 0.6%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상향조정은 예상보다 일찍 봉쇄 조치를 완화한 주요국의 2분기 실적 호조를 반영했다. 반면,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가 202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며, 내년 성장률은 2020년 6월 발표치보다 0.3%p 낮아진 5.2%로 전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I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점차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202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GDP 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이는 2020년 6월 전망치보다 0.6%p(2020년 4월 대비 -2.2%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2021년은 6.9%로, 지난 전망치보다 0.3%p(2020년 4월 대비 -0.7%p) 상향 조정했다.

다만 감염률, 봉쇄 조치의 강도, 산업구조 등에 따라 국가별 경제전망은 달랐다. IMF는 바이러스 전파율이 낮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정상화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중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 대비 0.9%p(4월 대비 0.7%p) 상향한 1.9%로 전망했다. 2020년 2월에 최저점을 찍은 이후, 투자와 소비의 점진적인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 속도가 빨랐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이 빠르게 나타난 국가들은 광범위한 보건·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봉쇄 조치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봉쇄 조치를 연장한 주요 신흥국은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인도의 GDP는 10.3% 역성장하고, 필리핀(-8.3%), 말레이시아(-6.0%) 등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피지(-21.0%), 몰디브(-18.6%) 등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2020년 GDP가 7.5% 줄어드는 등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회복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¹ IMF는 아시아·태평양(Asia and Pacific), 유럽(Europe), 중동 및 중앙아시아(Middle East and Central Asia),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서반구(Western Hemisphere)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² IMF는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2020년은 6월 발간) 수정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위주로 전망치를 조정한다.

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단위: %, %p)

구분	2020년	2021년	2020년 4월 전망 대비 변화		2019년 10월 전망 대비 변화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아시아·태평양 (Asia and Pacific)	-2.2	6.9	-2.2	-0.7	-7.3	1.7
선진국 (Advanced)	-4.2	2.9	0.3	-0.8	-5.4	1.4
호주(Australia)	-4.2	3.0	2.5	-3.2	-6.4	0.4
뉴질랜드(New Zealand)	-6.1	4.4	1.1	-1.6	-8.8	1.7
일본(Japan)	-5.3	2.3	-0.1	-0.7	-5.7	1.9
한국(Korea)	-1.9	2.9	-0.7	-0.5	-4.1	0.1
대만(Taiwan)	0.0	3.2	4.1	-0.3	-1.9	1.1
싱가포르(Singapore)	-6.0	5.0	-2.5	2.0	-7.0	3.4
신흥국 (Emerging and Developing)	-1.7	8.0	-2.7	-0.5	-7.7	1.8
중국(China)	1.9	8.2	0.7	-1.0	-4.0	2.3
인도(India) ¹⁾	-10.3	8.8	-12.2	1.4	-17.3	1.4
중국·인도 제외 신흥국	-2.5	5.9	-2.3	-1.8	-7.7	0.6
인도네시아(Indonesia)	-1.5	6.1	-2.0	-2.1	-6.6	0.9
라오스(Lao PDR)	0.2	4.8	-0.5	-0.8	-6.3	-2.0
말레이시아(Malaysia)	-6.0	7.8	-4.3	-1.2	-10.4	2.9
미얀마(Myanmar)	2.0	5.7	0.2	-1.9	-4.3	-0.4
필리핀(Philippines)	-8.3	7.4	-8.9	-0.2	-14.4	1.0
태국(Thailand)	-7.1	4.0	-0.5	-2.1	-10.2	0.5
베트남(Vietnam)	1.6	6.7	-1.1	-0.3	-4.9	0.2
태평양 도서국 등 (Pacific Island and Others)	-7.5	4.2	-5.2	-0.6	-11.3	0.7
부탄(Bhutan)	0.6	-0.5	-2.1	-3.3	-6.6	-6.4
피지(Fiji)	-21.0	11.5	-15.2	4.5	-24.0	8.3
몰디브(Maldives)	-18.6	12.7	-10.5	-0.5	-24.6	7.2
아세안 ²⁾ (ASEAN)	-3.4	6.1	-2.7	-1.3	-8.1	1.1
아세안 5개국 ³⁾ (ASEAN-5)	-4.4	6.0	-3.1	-1.5	-8.8	1.3

주 1)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3월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구성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지칭

자료: IMF(2020),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또한 IMF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경제는 빠르고 강하게 회복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신용 경색으로 인한 높은 과잉 채무 등을 우려했다.

정책 권고 사항

IMF는 최우선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활동을 권고하며, 아직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한 국가는 검사 확대 및 감염경로 추적과 의료시설 확충 등으로 전염 억제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특히 시기적절한 봉쇄 조치와 출구전략은 코로나19 확산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상흔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적극적인 재정·통화·금융 정책과 구조적 개혁도 권고했다. 의료비용,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린 뉴딜(Green Energy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를 늘리고 원격 근무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봤다. IMF 분석 결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GDP는 3% 높이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은 실질경제 GDP와 잠재경제 GDP의 격차가 크고 물가상승의 압박이 낮다면 확장적인 정책 기조 유지를 주문했다. 특히 정책금리 인하, 비전통적 통화정책(Unconventional Monetary Support)³ 등과 함께 물가상승의 압박이 낮은 경우에는 부채의 화폐화(Debt Monetization)⁴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화를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s)을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조언했다. 사회안전망(Safety Net)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직업훈련과 직무 전환을 장려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제도(Insolvency Frameworks)는 기업구조조정(Corporate Debt Restructuring)과 자원 재분배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규 투자, 수출, 창업 등을 위한 행정 부담과 각종 규제의 완화도 권고했다.



³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저금리 상황에서 국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⁴ 부채의 화폐화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국고채를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그 속에 데이터 라벨링

dBrain운영본부 기술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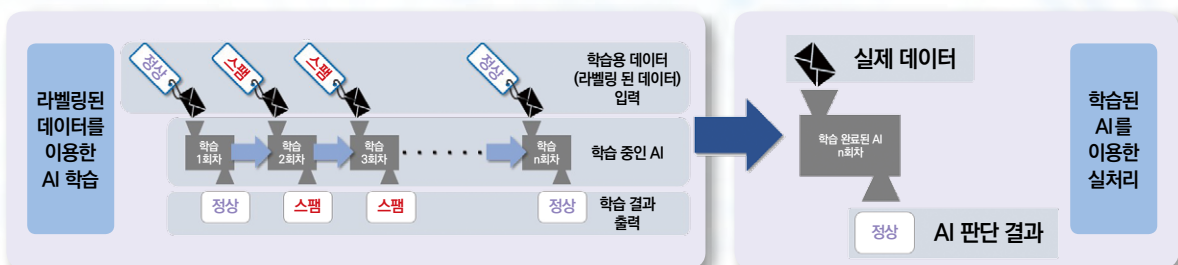
정부의 뉴딜정책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입니다. 이 코너는 데이터 뉴딜과 관련한 모든 소식, 즉 신기술, 정부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합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전기를 값싼 공공재(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경제부흥을 이끌었듯이, 한국재정정보원은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Data for All)를 꿈꿉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D.N.A 생태계 강화」 부문에는 데이터의 수집·개발·활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데이터 라벨링이다.

데이터 라벨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AI의 학습 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준으로 할 때 정답 있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지도학습과 정답 없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비지도학습이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지도학습이다.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 원인과 결과가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다. 즉 「데이터-정답」, 「입력-출력」, 「원인-결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하는데 데이터를 넣으면 정답이 나오도록, 입력을 하면 원하는 출력이 되도록, 원인 값을 넣으면 올바른 결과값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답, 출력,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데이터 라벨링이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이나 그림에는 '고양이', 강아지 사진에는 '강아지'라고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과 수신된 이메일에 스팸 메일과 정상 메일에 표시를 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런 작업은 사람이 직접 일일이 처리해 주어야 한다. AI의 발전에 밀거름이 되는 결정적인 작업인데, 라벨링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AI의 학습과 정확도 향상에 유리하다. 즉, AI를 위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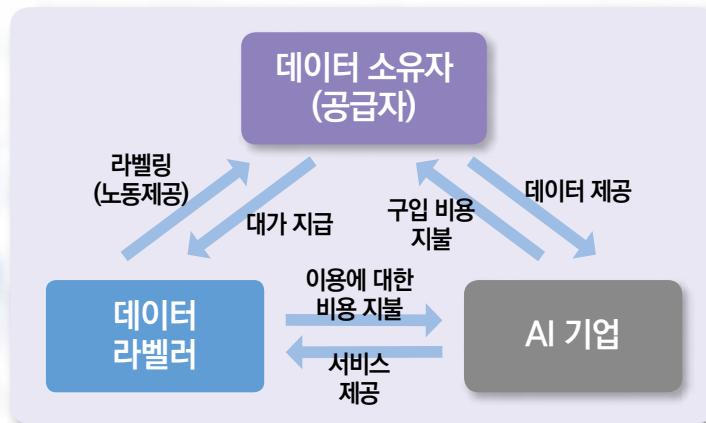
그림 1. 데이터 라벨링을 이용한 스팸 메일 판독 AI 학습 예시



AI의 발전에 있어서 데이터 라벨링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이 필수로 요구된다는 것에서 뉴딜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은 단순히 경기 부양의 의미로 미국의 뉴딜에서 용어만 따온 것이 아닌 노동력과 산업 발전 면에서도 미국의 뉴딜과 비견될 수 있다. 미국 뉴딜의 후버댐 건설에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그만큼의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었다. 완공 후에는 비옥한 곡창 지대와 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추가적으로 안겨주었다. 한국형 뉴딜을 이에 비교해보자면 댐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는 데이터 댐에 가치 있는 데이터를 채워주는 데이터 라벨러이며 부수적인 사업 효과는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산업과 같다 할 수 있겠다.

댐 건설 이후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라벨링이 자리를 잘 잡으면 ‘데이터 보유자(공급자)’ - ‘데이터 라벨러’ - ‘AI 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2. 데이터 라벨링과 활용에 대한 순환구조



참고 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사업 본격 착수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lId=_policycom2&artId=3070219
- [최강시사] 김상조 (2020). "한국판 뉴딜은 혁신적 포용국가 시즌 투...새로운 사회계약"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434>
- [장동인의 AI와 일하는 법](2020). 데이터 레이블링 사업의 중요성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2/2020061203470.html

「 Interview 」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유 영 섭
사무관
「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의 다양한 국정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어떻게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의의 △내용 △기대효과 등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20~2024년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재무경영과 유영섭 사무관을 만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정재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기르는 재무경영과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유영섭 사무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점검과 주요 현안 대응은 물론 담당기관(한국전력공사)의 정원 조정, 출자 협의까지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공동발굴하고 구매하여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기술마켓’의 구축·운영도 거들고 있다.

“‘에너지 기술마켓’은 작년에 공공혁신과에서 근무하면서 10개의 SOC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OC 기술마켓’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을 발판삼아 이번에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마켓은 지난 10월 28일 플랫폼 개통식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영섭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 결산 재무정보 분석, 구분회계 관리와 함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주요 공공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 개정 당시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과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하자 공사채로 민간자금이 쏠리고 채권금리를 상승시켜 민간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

2014년에는 이 법률의 추가 개정을 통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또한 경영환경과 경제여건의 변동, 정책기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재무경영과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재무정보 분석, 공공기관의 결산, 구분회계의 관리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 공공기관의 출연·출자 협의 총괄, 출자회사 관리
-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등 투자집행 관리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해외신용평가사 및 IMF 면담·협의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31개) 및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5개)의 정원 조정, 출자 협의 등

써,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관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지난 9월에 39개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정해진 39개의 대상기관은 공기업 23개, 준정부기관 16개이다.

자산 2조원 이상 (37개)	공기업 (22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업, 인천국제공항, 발전5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준정부 (15개)	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손실보전 규정(2개)		대한석탄공사(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준정부기관)

“특히 이번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 사태가 공공기관들에 미친 재무적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기관들의 재무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에는 39개 대상기관 중 19개 기관에서 11.9조원 규모의 수입결손이 전망됐고, 결손액 중 4.2조원은 사채 발행 등 부채로,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의 사용으로 충당해 부채 비율이 증가(부채 비율 7.8%p 증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회, 여행이 제한되자 카지노(강원랜드), 경륜·경정(국민체육진흥공단), 경마(한국마사회) 등의 사업장이 장기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국내외 여객 수요 감소로 공항·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수입도 줄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의 정책지원에 따라 수입이 추가적으로 감소했다.

“수입이 감소했지만,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신설 지급, 해외입국자 수송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기 때

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수입의 감소와 지출 증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채 전망(목표)에 반영하여 관련 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유영섭 사무관은 “어려운 재무여건 아래서도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에 선결제·선구매 추진, 투자 조기집행,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투자 규모 1.5조원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채 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여건이었지만, 7월부터 1개월여에 걸친 기관별 협의를 통해 과도한 사업 확대 계획을 조정하고, 운전자금 규모를 적정화하는 등 부채 규모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중장기 재무전망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자산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2020년 824.5조원에서 2024년에는 975.1조원으로 150.6조원 수준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부채 규모는 2020년 521.6조원에서 2024년 615.8조원으로 94.2조원 증가되지만, 부채 비율은 170% 내외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채 규모는 2020년 전년 대비 24.4조원 수준 증가한 이후, 2024년까지 매년 평균 23.5조원 수준 증가하는데, 이는 주로 한국전력그룹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0조원으로 감소한 이후 정상화되어 3~6조원 대 흑자를 시현할 전망입니다.”



어려운 재무여건 아래서도 공공기관들이 올해 상반기에 선결제·선구매 추진, 투자 조기집행,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투자 규모 1.5조원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싶다.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19년 (실적)	2020년 (A)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	증감 (B-A)
자산 규모(조원)	794.6	824.5	860.4	901.0	934.2	975.1	150.6
부채 규모(조원) (전년 대비 증가율, %)	497.2	521.6 (4.9)	540.8 (3.7)	571.0 (5.6)	591.1 (3.5)	615.8 (4.2)	94.2
부채 비율(%)	167.1	172.2	169.2	173.0	172.2	171.4	△0.8%p
당기순이익(조원)	0.5	△3.0	5.2	3.4	4.6	6.6	9.6

재무관리가 불러온 긍정적인 효과

재무경영과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큰 틀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 사전협의, 구분회계 제도, 재무실적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다방면으로 재무관리를 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부채감축계획은 2012년 232%에 달하던 부채 비율을 2019년 167% 수준으로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돕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가 완료된 218개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사전준비가 부족해 자진 철회한 94개 사업(43.1%)의 추진을 방지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재무관리를 위해 나아갈 방향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이행 점검과 관리가 필수다. 유영섭 사무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상황도 계속해서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부채 관리를 포함한 각 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후속 재무관리계획에 환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영평가 지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 부채 비율(계량) 달성 여부와 투자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노력(비계량) 등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기관은 주무부처와 함께 리스크를 관리해나가고, 필수적인 투자는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 점검 노력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낮아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 개선을 통한 건전성 관리 방안도 병행한다. 첫째로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비 관리의 공동 원칙(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해 사업비 관리를 강화했다. 둘째로, 공공기관은 국가신용등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채를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 단기 자금 수요에도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장기 차입에 의존할 위험이 있기에 자금운영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지 적정성을 점검하고, 차입 수단을 다변화하

는 등 부채 관리에 적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자부담 없는 회계 상 부채인 국민건강보험 급여충당부채와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충당부채 등 충당성 부채가 많아 재무건전성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진행 중이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충당부채의 경우 2020년 10.1조원 수준인데, 이것은 연도 중 지급 신청이 되지 않거나 보험료 심사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보험급여 이월예산이 부채로 인식된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급여청구 시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심사기간을 단축 등 집행률을 제고하여 부채를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무기관인 정부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주무기관의 과도한 사업 확대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서비스 요금 등이 재무건전성 악화에 구조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재무관리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무기관과 물가당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섭 사무관은 재무건전성 담당자로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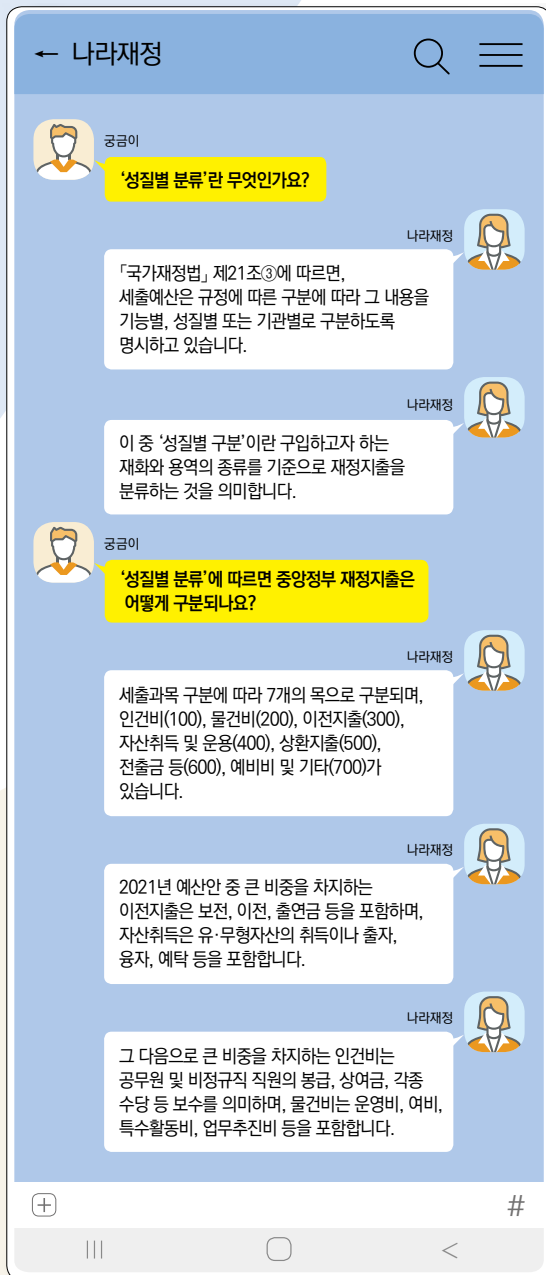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목표인 61.5조원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투자 목표는 작년 투자 실적 54.6조원보다 6.9조원(12.6%) 수준 증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지연, 해외투자사업 중단, 장마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집행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투자실적을 점검하여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필요시 대체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든든하게 관리해나가는 재무경영과의 내일을 기대해보자.



재정의 성질별 분류란 무엇인가요?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지난 10월호 재정 Talk Talk에서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영역에 따라 재정을 기능별로 분류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분류 외에도 「국가재정법」에서는 지출을 각각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성질별, 기관별로도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정의 성질별 분류와 세 부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월급을 받는 등 수입이 생기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지출 항목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처에 따라 식비, 생활용품 구입과 같은 생활비와 세금, 보험료와 같은 고정비, 그리고 경조사비, 여행자금과 같은 예비비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정부도 발생하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지출 내용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국가재정법」 제21조③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정의 성질별 분류란 경비의 직접적인 대상, 즉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를 기준으로 재정지출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7개의 성질로 구분되며, 이는 세출과목 구분에 따라 목이라고 부릅니다. 즉, 인건비(100), 물건비(200), 이전지출(300), 자산취득 및 운용(400), 상환지출(500), 전출금 등(600), 예비비 및 기타(700)로 분류됩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및 비정규직 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보수로 구성되며, 물건비는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특정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각 회계 및 기금 등에 교부, 출연, 보조, 전출·입의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자산취득 및 운용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 또는 자산 증식을 위한 유·무형자산의 취득이나 출자, 용자, 예탁 등입니다. 상환지출은 국내 차입금 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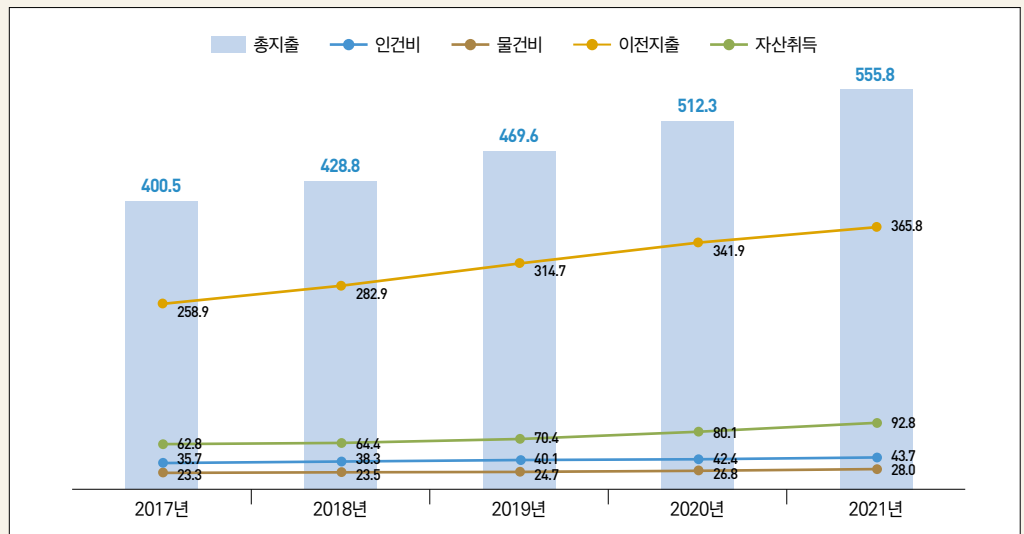
구성되며, 전출금은 회계·기금이 다른 회계·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비해 두는 비용입니다.

2021년 예산안 기준, 555.8조원¹ 중 이전지출이 65.8%(365.8조원), 자산취득이 16.7%(92.8조원), 인건비가 7.9%(43.7조원), 물건비가 5.0%(28.0조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이전지출과 회계·기금 간 주고받는 전출금을 제외하면 예산 중 자산취득과 인건비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예산의 총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한 항목은 이전지출, 자산취득, 예비비 및 기타인 반면, 인건비는 가장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¹ 총지출 기준이다.

주요 성질별 지출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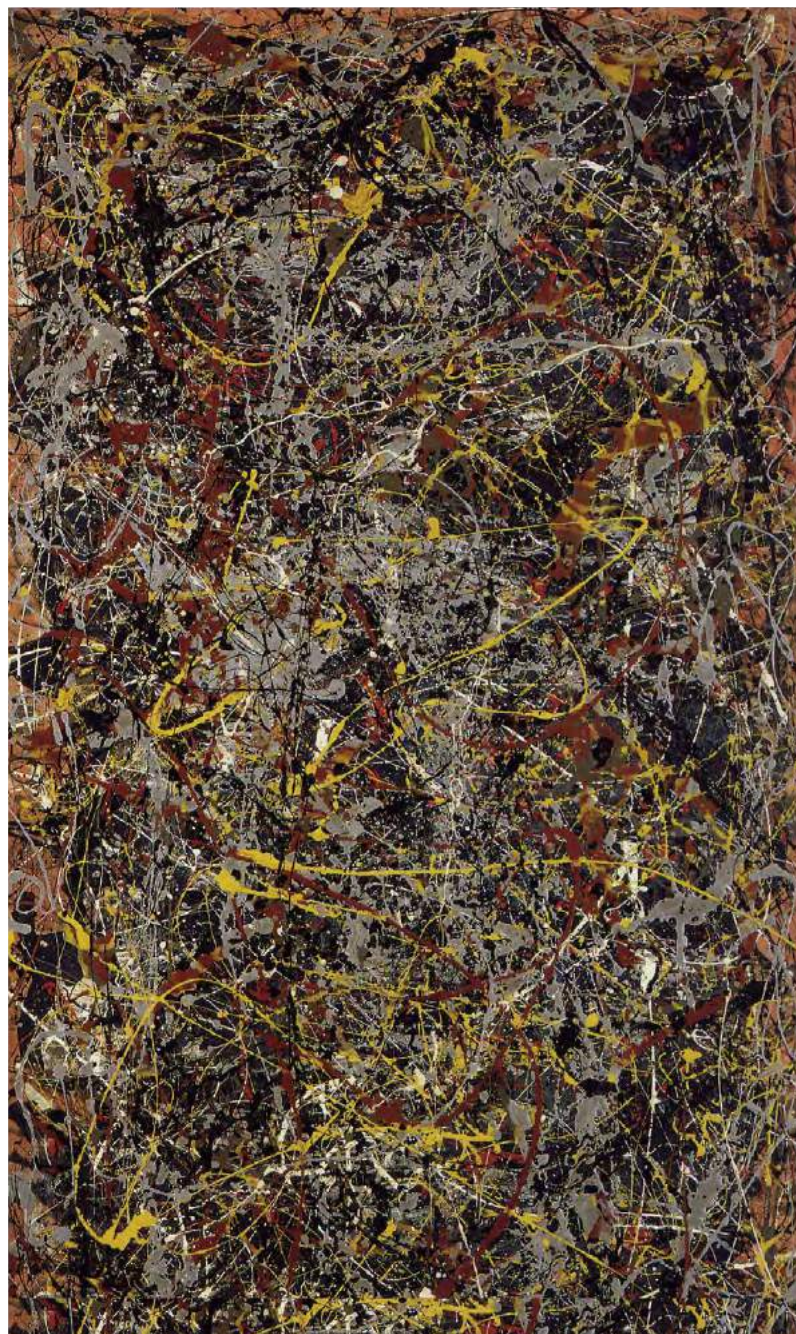


주: 2020년까지 본예산, 2021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각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21년도 예산안」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과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Paul Jackson Pollock, <No. 5>, 1948, Fiberboard, 2.4 x 1.2m, Private Collection,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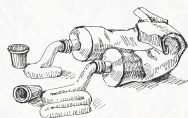
2006년 11월 뉴욕타임스는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 1912~1956)이 1948년에 제작한 스파게티를 엉클어 놓은 듯한 그림 〈No. 5〉가 멕시코의 금융인 데이비드 마르티네즈에게 1억 4천만달러에 팔린 것을 보도했다. 이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불과 5개월 전 클림트(Gustav Klimt)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Portrait of Adele Bloch-Bauer)〉이 에스티 로더 화장품 회사의 상속인에게 1억 3천5백만달러에 팔렸던 당시 최고가 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이었다.

이 작품은 줄리아 로버츠가 미술사를 전공하고 동부의 전통 있는 웰슬리(Wellesley) 대학교에 부임하는 주인공 캐서린 왓슨 역을 맡은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Monalisa Smile)〉에도 소개되고 있다. 웰슬리 대학교의 여학생들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비롯해서 전통적 회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짝이 없었다. 첫 시간부터 전통적인 강의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캐서린은 어떻게 그림을 보아야 하는지 가르치며 자유롭게 열린 사고를 주문한다. 이 영화에서는 그녀가 정형화된 미술양식에만 익숙해있던 학생들에게 현대 미술의 예술성과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추상화 계열의 새로운 작품인 잭슨 폴록의 그림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잭슨 폴록은 1930년 가을 뉴욕에 왔으나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고 또한 정신질환 치료도 받아야 했을 정도로 그의 뉴욕 생활은 엉망이었다. 그에게 행운을 선사한 사람은 바로 1942년 뉴욕에 미술 화랑을 연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든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다)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개인전을 열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는 1943년 비로소 개인전을 열 수 있었다. 이 개인전을 뉴욕의 유명 잡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으므로 스타 탄생이 단번에 이루어졌다.

폴록의 그림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소묘를 할 줄 몰라도 되네. 붓을 살 필요도 없고, 물감 깡통에 막대기를 넣었다가 꺼내 캔버스에 뿌리기만 하면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깡통에 구멍을 내 이리저리 뿌리면 되는구먼.” 이라고. 그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 늘어놓은 캔버스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물감을 흘리고 뿌리며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물감을 통째로 들이붓기도 했다.

드리핑 기법에 의한 우연성이 가져다주는 예술적 효과는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와 같은 충격을 캔버스에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폴록의 작업은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 없이
즉흥적인 행위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에게 붓은 ‘물감을 칠하는 도구’가 아니다. 차라리 ‘물감을 운반하는 도구’에 가깝다. 그는 우연히 이러한 ‘드리핑(Dripping) 기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 기법으로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전위미술 형식인 추상표현주의가 탄생했다. 미술평론가 해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는 이 드리핑 방식을 액션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고 명명했다. 최고가를 기록한 〈No. 5〉 역시 이 드리핑 기법의 소산이다.

액션페인팅에서는 작업 결과물 못지않게 작업하는 행위도 중요하다. 작업과정 자체가 완성된 작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액션페인팅은 작품의 제작과정이자 동시에 그것이 작품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화가의 움직임 자체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폴록은 자신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기보다 캔버스에 어떤 행위를 가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의 그림은 즉흥적으로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뿌리고 흘렸을 때 생기는 우연의 효과가 적극 이용되었다.

드리핑 기법에 의한 우연성이 가져다주는 예술적 효과는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와 같은 충격을 캔버스에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폴록의 작업은 어떠한 계획이나 의도 없이 즉흥적인 행위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는 그림을 미리 생각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 자신의 드리핑 기법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림의 기본

주제나 제목을 미리 생각해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을 붙일 수 없었다. 〈Number 1〉(1950), 〈Number 7〉(1951) 등 숫자를 적어 단지 작품을 구분했을 뿐이다.

미술사에서 볼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폴록이 차세대 미술가들에게 끼친 영향은 역설적으로 소묘를 못 해도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에 의해서 회화가 사물에 대한 모사(模寫)라는 고대 그리스인으로부터 강요된 관념이 사라지게 되었고, 회화가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관습도 깨졌다. 회화사에서 폴록의 창의적인 예술성은 그리는 행위에 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원시시대의 동굴벽화 이후 인류는 수직의 벽에 그림을 그렸다. 동굴 벽은 건물 벽으로 바뀌었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오늘날의 캔버스가 탄생했다. 하지만 화폭이 동굴 벽에서 캔버스로 '진화'했더라도 동굴 벽이든 캔버스든 물감을 칠하는 공간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그런데 폴록은 수직적인 캔버스를 마룻바닥에 수평으로 눕혔다. 벽에서 바닥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칠하기에서 뿌리기로 작업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서는 붓보다 붓을 진 몸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처럼 폴록의 작업의 중요성은 화가와 캔버스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전환은 미술사에서 일대 혁명이었다. 폴록은 새로운 추상회화의 기법을 현대미술에 도입한 것이다. 기본 데생 실력도 없었던 폴록이 미술사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또 다른 이유는 액션페인팅 기법으로 말미암아 20세기 후반 캔버스의 한계를 넘어서 작업과정을 중시하는 퍼포먼스 예술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의 전기 영화는 2000년에 〈폴록(Pollock)〉이란 제목으로 상영되었으나 흥행에는 실패했다. 에드 해리스(Ed Harris)가 폴록 역을 맡은 이 영화를 보면 예술가로서의 명성과는 달리 그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동성애 등으로 굴곡진 삶을 살았고, 결국 1956년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차량전복사고로 44세의 나이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스라엘 커즈너

Israel M. Kirzner (1930~)

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현재 자유주의연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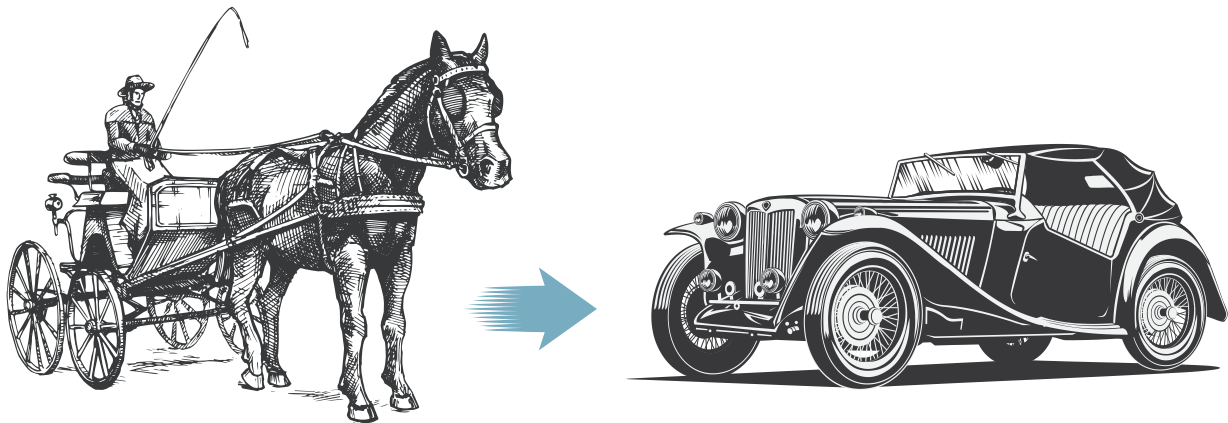
‘시장은 과정이다’라는 말에 인생행로를 바꾼 커즈너

시장경제의 매력적인 키워드로서 기업이 정신을 이론화하여 경제학을 훌륭하게 발전시킨 인물은 바로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경제학자 커즈너(Israel M. Kirzner, 1930~)다. 그는 졸업 후 은행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뉴욕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어느 한 교수의 한마디 말에 젊은 커즈너는 인생행로를 바꾸게 되었다. “시장은 균형이 아닌 과정이다”라는 말 때문이었다.

충만한 젊은이 커즈너를 매료시켰던 이 교수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였다. 그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류에게 문명화된 번영을 안겨주는 것은 오로지 자본주의뿐이라고 주장했던 자유주의의 거성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 후 커즈너는 평생 은사가 될 미제스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그의 원대하고 심오한 경제사상에 빠져들었고 결국 은행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학문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매력적인 키워드가 각인됐다. 커즈너는 기업이 정신론을 제대로 개발하면 왜 시장은 과정인가의 물음도 풀릴뿐더러, 시장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기업이 정신론을 개발하여 자유시장의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 아닌 ‘건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커즈너의 핵심사상은 기업가의 상상력과 창조성에서 나오는 ‘기민성’이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화 등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이윤 기회를 포착하는 프로정신을 뜻한다. 이런 정신이야말로 창조적 건설이지, 슈페터가 말했던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의 도입이 마차 산업의 파괴가 아니라 마차 산업에 대한 과도한 자원배분을 개선시켰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업가 정신은 특수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든 노동자든 누구나 보유하는 정신이라는 것이 커즈너의 믿음이었다. 기업가 정신을 엘리트의 정신이라고 믿었던 슈페터와는 달리 그는 그런 정신을 보편화했다. 시장이 과정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윤 기회와 혁신거리를 찾는 기업가 정신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과 경제성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윤 기회의 발견이라면
 기업가 이윤이 높은 것은 경제성장애의 기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기업가의 기민성은 끝없고, 성장의 잠재력도 한이 없다.
 그래서 성장의 한계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그의 주장도 매력적이다.

기업가 이윤의 존재 이유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커즈너의 노력도 흥미롭다. 흔히 자본주의의 분배윤리는 누구나 생산한 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이라고 한다. 생산에 따른 분배가 윤리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기업가는 생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윤은 착취라는 마르크스의 시각의 분배윤리 전제가 아닌가!
 그러나 그런 시각은 기업가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커즈너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과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재화의 생산이 시장성을, 다시 말하면 이윤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발견이 없었으면 생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탁월한 통찰이다. 기업가 이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대가라는 것이다. 특정한 재화의 생산이 장차 이익을 가져오리라는 기업가적 발견과 비전이 없으면 노동의 투입과 함께 그 재화의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산된 재화는 기업가에 속하고 그 재화에서 계약 노임을 뺀 이윤은 당연히 생산의 발견자인 기업가에게 속한다.

경제적 번영은 공짜 점심을 발견한 결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나 그 말은 기업가 정신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말이라고 커즈너는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가적 발견은 공짜라는 이유에서다. 기업가적 발견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돌을 수집하는 수석가(壽石家)에게 어느 한 돌의 시장성(市場性)의 발견은 공짜다. 발견한 다음에 잘 팔리도록 돌을 다듬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발견한 후에 시장에 판매할 때까지 드는 비용에만 적용된다. 기회비용도 바로 발견한 후에 생겨나는 비용이다.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의 발견은 기회비용도 계산할 수 없다. 공짜 점심은 시장에 널려있다는 것이 커즈너의 통찰이다.

경제적 번영도 널려있는 공짜 점심의 기업가적 발견의 덕택이다. 커즈너는 기업가 정신의 이해 없이는 경제발전도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혁신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아이패드, 인터넷의 발견 등은 모두 시장의 그 같은 과정의 결과다. 주목할 것은 혁신의 원천이다. 어느 한 기업가의 혁신은 다른 기업가의 행동에서 나온다. 고속도로, 가솔린, 수리시설을 비롯한 시장이 없다면 헨리 포드에게 자동차의 대량생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든 무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고안함으로써 스티브 잡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기업가 정신은 더 많은 기업이 정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성장은 자기증폭의 과정이라는 것이 커즈너의 설명이다. 기업가 정신과 경제성장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윤 기회의 발견이라면 기업가 이윤이 높은 것은 경제성장에의 기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기업가의 기민성은 끝없고, 성장의 잠재력도 한이 없다. 그래서 성장의 한계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그의 주장도 매력적이다.

이와 같이 커즈너는 경제학계가 외면하던 기업가 정신론을 부활하여 매우 심오하고 원대하게 개발했다. 그를 기업가 정신론의 개척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경제사상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6년 스웨덴 정부가 수여하는 국제기업가정신 연구상을 받은 것도 그런 공로 때문이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알고리즘 리더 -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01

지은이

마이크 월시

옮긴이 방영호

출판사 알파미디어

발간일 2020년 9월 25일

- 저자 마이크 월시는 매년 300일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트렌드를 조사하고 각종 사례를 수집해 비즈니스의 미래에 관한 강연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그룹 뉴스 코퍼레이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전략기획 책임자였던 경험을 살려 인기 기조연설자로 활동 중이다.

66

지금 당장 과거의 리더십을 버려라!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 일하고 있다. 자동화와 알고리즘, AI는 우리 일상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마저 바꾸고 있다. 20세기는 인간 리더들이 이끌었다면, 21세기는 현대의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인간, 둘의 관계를 깨우친 ‘알고리즘 리더’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며 <포춘>지에 선정된 세계 50대 기업에 경영 자문 이면서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펼쳐온 저자 월시는 앞으로 달라질 미래에 자신의 업무, 리더십과 창의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개인들에게 답을 제시한다. 세계 최고 비즈니스 리더, AI 개척자 및 데이터 과학자와 수년에 걸친 인터뷰 및 연구를 바탕으로 알고리즘 시대에 리더로서 생존하는 동시에 이를 넘어서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도출한 것이다. 이 책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사람들을 이끌어갈 방법을 찾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의 활용법

프롤로그 알고리즘 리더의 시대가 왔다

PART 1. 사고를 전환하라

PART 2.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PART 3. 빅데이터는 왜 유용한가?

에필로그 이끌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참고문헌

스마트 거버넌스 - 디지털 발자국, 시민참여의 혁신

02

지은이

임지원, 안순재,
이새미

- 저자 임지원, 안순재, 이새미는 동아대학교 스마트거버넌스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환경정책, 갈등관리, 거버넌스, 인공지능, 알고리즘, 서비스 마케팅, 리더십 ICT, 텍스트 마이닝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출판사

유원복스
발간일 2020년 6월 25일

KPFIS's
library

66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최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데이터 공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해 사회 거버넌스를 혁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새로운 정보화 수단으로 사회 문제점을 보다 잘 감지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유지하여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사회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 블록체인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신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와 같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시시각각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 책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문제해결 및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책과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추구하는지 스마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스마트 거버넌스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거대담론이 되기까지 정책과정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1장 거버넌스의 이해
- 제2장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거버넌스
- 제3장 스마트 거버넌스의 적용
- 제4장 스마트 거버넌스의 미래

Financial Calendar

11

月

November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발표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 재정**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August

08

- 경제**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0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Fitch, 10.7.)

- 피치는 코로나19 대응 하에서도 효율적 재정관리로 단기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

□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IMF, 10.13.)

- IMF는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며 상반기 큰 폭의 경기 위축을 전망했던 지난 6월 전망에 비해 마·유로존 등의 2분기 GDP 실적이 개선된 점 등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5.8%(2020년 6월 대비 +2.3%p)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1.9%(2020년 6월 대비 +0.2%p), 2021년은 2.9%(2020년 6월 대비 -0.1%p)로 전망

□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한국은행, 10.27.)

- 202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9% 성장(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5% 증가했다고 발표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경제**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경제** 통계청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대상 「e나라도움 맞춤형 컨설팅」 시행 및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지원

한국재정정보원은 10월 15일, 16일 양일간 대구지역 사무소에서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e나라도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대구문화재단에서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보조사업자들의 e나라도움 실습교육 및 1:1 업무 지원을 재정정보원에 요청함에 따라 계획되었다.

재정정보원 대구 지역사무소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전산 업무를 어려워하는 40여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업무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재정역량 성장' 협약

여성가족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10월 20일 「청소년을 위한 재정역량 성장 협약」을 맺었다. 청소년들에게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배움·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재정이해도와 재정책임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원은 △청소년 특별회의 △꿈드림센터 △국립청소년수련원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프로그램에 재정배움 콘텐츠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지도자 대상 직무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 특별회의와 국민참여예산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소년박람회, 국제교류 등의 청소년 행사에 재정배움 콘텐츠 부스 설치나 체험기회 제공 등의 협력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김재훈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무상교육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시기에 여성가족부와 함께 재정배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협약이 청소년들이 우리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역량을 갖추어 미래사회의 균형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11. 24. ~ 2020. 12. 14.

문 제

재정의 성질별 분류 중
정부가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교부, 출연, 보조, 전출·입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10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데이터 3법

☆ 상품 당첨자

198*****@gmail.com
hon*****@cau.ac.kr
del*****@daum.net
inn***@metro.seoul.kr
eas*****@hanmail.net
091*****@naver.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저에게는 국가의 재정이 어렵기만 했는데 지인의 소개로 잡지를
접한 후 공부가 되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도식화가 잘 되어 있어
평소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었는데,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재정은 어렵지만 나라재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잡지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hon*****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